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KINU 연구총서 12-13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672-0 93340

가 격 ₩8,000

© 통일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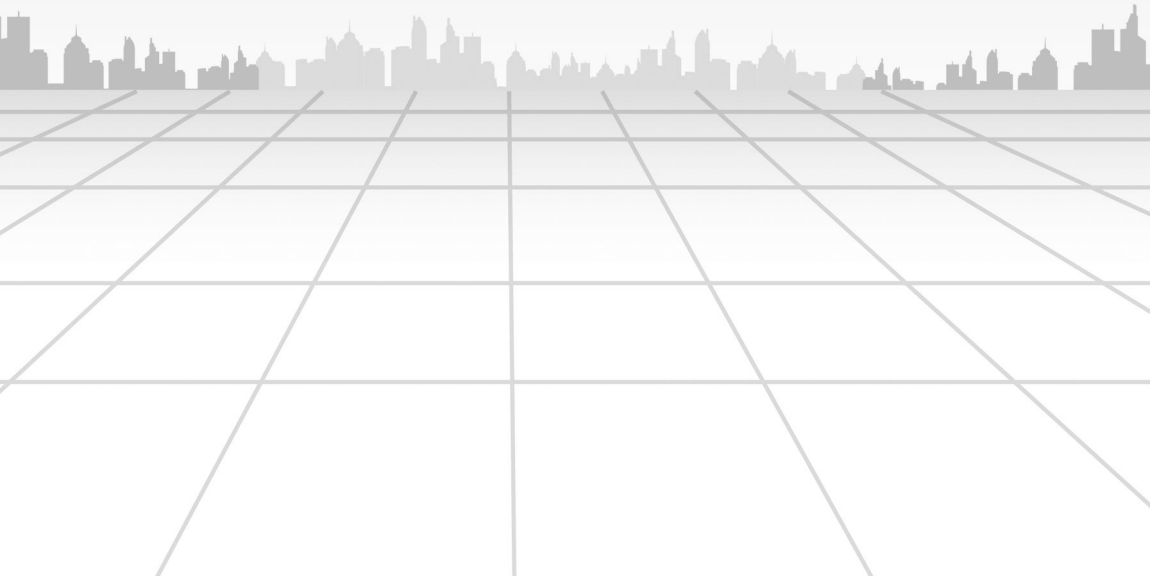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Contents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요 약 .....	vii
<b>I. 서 론 .....</b>	<b>1</b>
1. 연구 목적 및 방법 .....	3
2.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개념 .....	13
<b>II. 4대 전략사업 .....</b>	<b>23</b>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25
2. 철원 평화산업단지 .....	40
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61
4. 고성 유엔환경기구 .....	79
<b>III. 3대 중점사업 .....</b>	<b>93</b>
1.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95
2. 유해발굴 .....	100
3.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114
<b>IV. 법·제도적 준비 .....</b>	<b>123</b>
1. 관련 법·제도 검토 .....	125
2. 개별 법률에 대한 법·제도 검토 .....	140
참고문헌 .....	146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7

# 사진·표·그림 목차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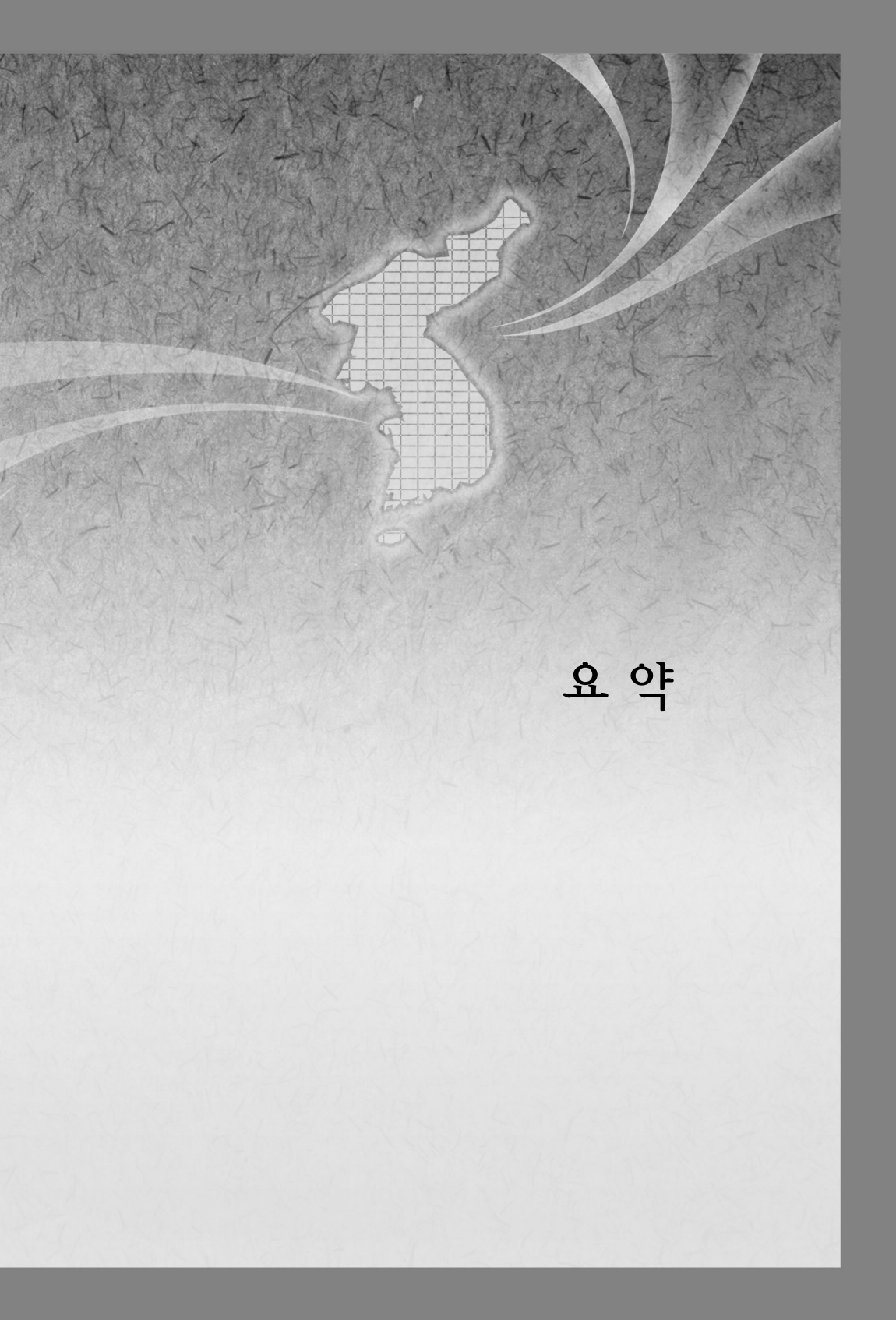


[사진 I-1-1] 「정전협정」 .....	4
[사진 II-1-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제1안 .....	31
[사진 II-1-2]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제2안 .....	32
[사진 II-2-1] 철원 평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구상도 .....	53
[사진 II-3-1]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위치도 및 구상도 .....	69
[사진 II-3-2] 평화담문화공연장 .....	71
[사진 II-4-1] 고성 유엔환경기구 위치도 및 구상도 .....	86
[사진 III-1-1] DMZ Today 대상도 .....	97
[사진 III-3-1]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위치도 .....	119
[표 II-2-1] 철원평화산업단지 유치업종 .....	54
[그림 I-1-1]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6
[그림 I-1-2]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종합적 공동연구 .....	11
[그림 I-2-1]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전개방향 .....	15
[그림 I-2-2] 국가전략 차원의 국가안보목표 .....	16
[그림 I-2-3] 국가전략 차원의 국가안보목표 및 중점사항 .....	16
[그림 I-2-4] DMZ 평화적 이용의 단계 .....	22
[그림 II-1-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단계 .....	36
[그림 II-1-2]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2단계 .....	37
[그림 II-1-3]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3단계 .....	38
[그림 II-2-1] 개성공단과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비교 .....	43



[그림 II-2-2]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의미 .....	48
[그림 II-2-3] 철원 평화산업단지 1단계 .....	58
[그림 II-2-4] 철원 평화산업단지 2단계 .....	59
[그림 II-2-5] 철원 평화산업단지 3단계 .....	59
[그림 II-3-1] 평화댐문화공연장 .....	71
[그림 II-3-2]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단계 .....	76
[그림 II-3-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2단계 .....	76
[그림 II-3-4]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3단계 .....	77
[그림 II-4-1] 고성 유엔환경기구 1단계 .....	89
[그림 II-4-2] 고성 유엔환경기구 2단계 .....	90
[그림 II-4-3] 고성 유엔환경기구 3단계 .....	91
[그림 III-3-1]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위치도 .....	120





요약



- 신정부에게 국가 성장,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함.
- 국가 4대 중점전략과 3개의 중요사업으로 구성됨.

## 1. 4대 중점전략

###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초기에는 참전 16개국과 한국, 유엔에서 출발하여,
  - 중국적으로 우리를 지원했던 67개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포함하는,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상호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
- 파주 북방 남북한 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로 조성될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중간지점인 DMZ내에 남북한이 모두 숭모하고, 동양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지역으로 삼음.

###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 남북 철원 DMZ 및 접경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의, 남측을 중심

으로 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함.

- 북측 땅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성 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경협을 추진함.

-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함.

#### 다.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현재 추진 중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계기로 평화의 댐을 세계 최초의 댐을 활용한 평화댐문화공연장으로 전환하고 그 일대의 평화조형물과 더불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함.
- 평화의 댐과 임남댐(금강산댐)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평화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북한강 상류지역의 평화생태호수공원, 즉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북-남간 세로로 가르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이제까지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서로, 즉 가로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북한강 상류지역을 시발로 하여 상호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생태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북-남간 세로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하나씩 추진하고,
- 남북관계가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DMZ와 접경지역 전역에 걸친 가로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보전에 협력하는 동시에 상호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를 추진함.

## 라. 고성 유엔환경기구

- 남한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고, 남북 고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현재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황사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과 수질·해양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계기로 문제해결과 공동협력의 동력으로 삼음.
- 유엔환경기구를 시발로 하여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 등을 유치하여 이 지역을 유엔환경평화타운으로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나아가 금강산 지역에 까지 환경 친화적인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의 연결을 계기로 이 지역을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으로 삼음.

## 2. 3대 중요사업

### 가.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201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된 60주년을 맞아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우리측 주요 군전망대에서 DMZ 전 지역을 방송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 함.
- 전 세계 시민들에게 DMZ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함.

### 나. 유해발굴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서 DMZ내 특정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숨진 모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함.
  -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및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의 참여도 추진함.
- 우리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

## 다.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DMZ내에 위치한 남북의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에 유엔평화병원을 건립하여 남북한 주민은 물론, 남북한 군인들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
- 병원은 양방과 한방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구성하며, 북한 의료 인력의 교육 및 상호 공동연구의 추진 등으로 확대함.

주제어: DMZ, 정전협정, 국가전략,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남북경협, 6·25전쟁, 유엔환경기구, 국군유해발굴

## Abstract

# National Strategy for the New Government: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Son, Gi-Woong et al.*

The reason to peacefully utilize DMZ where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 interests sharply collide is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national growth of Korea bu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promotion of reunific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could draw South-North Korean consent and international support o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is area, where overall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politics, military, economics, culture, environment are intertwined, should be deliberated as a national strategy.

With DMZ's political, militaristic,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eaceful utilization methods of the DMZ which should be dealt on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during the 5-year-term of the new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create World Peace Culture Town centered in Paju area across the northern bordering region in which all the countries that were involved in the Korean War could participate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harmony.

Second, Peac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established centering Cheorwon County area across the northern bordering area. The center of the Complex should be stationed in the South side of Cheorwon County unlik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Complex should be built also in the North of DMZ so that South and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could be exchanged through the DMZ.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eorwon County and its ecological value, the sectors of clean industry and agri-food should be secured in the area and the restoration of Gyeongwon and Mt. Geumgang railroads should be promoted.

Third, we should create World Peace and Ecology Lake Park in between the dam of peace and the dam of Mt. Geumgang in the upriver of Bukhan river.



Also, we should push forward the World Peace and Ecology Lake Park to be designated as UNESCO's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which will be created across North and South with the DMZ in the center. Also, we should take the current supplementary construction of the Peace Dam as a chance to switch the dam into a Dam of Peace Cultural Performance Theat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create the area a symbol of world peace with the peace sculptures in the region.

Fourth, we should attract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in the DMZ between Mt. Geumgang and Mt. Sorak where South-North Korea's national parks are. The UNEO should be utilized as an incentive to resolve energy and environment issues every Northeast Asian nation faces and to develop pan-East Sea sphere.


Fifth, we will air the realtime video footage of the DMZ area to the whole world from the major GOP and observatory located in the DMZ's Southern Limit Line on July 27, 2013 which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The video footage will introduce the reality of the DMZ and our will to peacefully utilize the DMZ to the world.

Sixth,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n War Armistice, we should carry out a meaningful project between the two Koreas as a gesture to build a new South-North Korean relation; a part of the limited and specific areas within the DMZ will be open for the excavation of Korean War victims' remains.

Seventh, UN Peace Hospital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Daesung-dong and Kijung-dong which are South and North Korean towns located within the DMZ so that South-North Korean residents and soldiers can share the facility together.

Key Words : DMZ,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National Strategy,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Korean War,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 Excavation of Korean War Victim's Remains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방법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로 ‘DMZ 평화적 이용’과 ‘DMZ 생태평화 공원 조성’(2008.2)을 제시하였음.
  -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의 건설’을 목표로 DMZ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였음.
- DMZ 평화적 이용은 ‘남북대결의 상징 ⇒ 남북협력의 상징’을 의미하여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 건설’의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임.
- DMZ는 좁게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넓게는 유엔의 모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대상지역으로서 DMZ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의 신아시아 협력외교, 국제협력외교와 직결되고 있음.
- 그러나 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로 DMZ 평화적 이용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2011년 9월 UNESCO에 제출한 군사분계선 남쪽의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북한의 반대, 일부 준비 부족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성장, 남북관계 개선, 통일 촉진이란 민족대

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이 차기 신정부에 의해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 다시 한 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신정부는 새로운 국가비전에 입각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함.
  - 경색과 대결구도를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이 필요함.
  -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를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국가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특히 2013년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과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사진 | -1-1 | 「정전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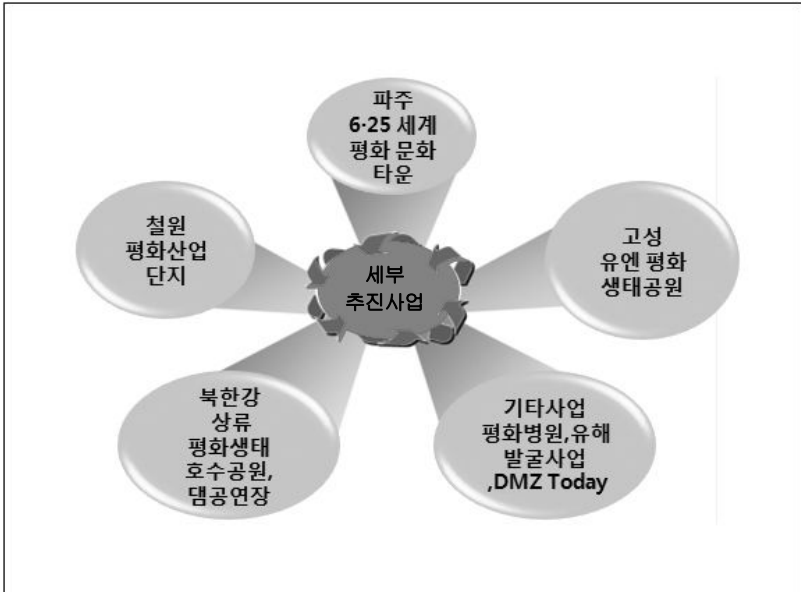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정부 5년의 임기 내에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야 할,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 남북이 윈-윈(win-win)하면서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 지속적인 남북 접촉과 교류협력의 통로를 확보하여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 인적, 정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 통일을 유인·촉진하고자 함.

## 나. 주요 연구내용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을 제시함.
  - 한반도 번영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 실천 가능한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 국가전략으로 제안하는 DMZ 평화적 이용은 4대 중점전략과 3개의 중요사업으로 구성됨.
  - 4대 중점전략은 ①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② ‘철원 평화산업단지,’ ③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④ ‘고성 유엔환경기구’임.
  - 3개 중요사업은 ①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② ‘유해발굴,’ ③ ‘대성동 유엔평화병원’임.<sup>1</sup>

<sup>1</sup> 통일연구원은 2009년부터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그것을 수정·보완·정련·체계화한 결과임.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0); 손기웅,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서울: 통일연구원, 2011); 손기웅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손기웅외, 『접경지역의 평화



Ⅱ 그림 1-1-1 Ⅱ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1) 4대 중점전략

####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초기에는 참전 16개국과 한국, 유엔에서 출발하여
  - 종국적으로 우리를 지원했던 67개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준 제안 검토』(서울: 통일연구원, 2009); 손기웅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서울: 통일연구원, 2010); 손기웅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서울: 통일연구원, 2010); 손기웅외,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서울: 통일연구원, 2011); 손기웅외, 『DMZ 총람: 환경·생태 현황』(서울: 코리아 DMZ협의회, 2011); 손기웅외,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서울: 코리아 DMZ협의회, 2011) 참조.



모두 포함하는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전체적으로 상호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면서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함.
- 파주 북방 남북한 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로 조성될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중간지점인 DMZ내에 남북한이 모두 숭모하고, 동양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물을 조성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상징지역으로 삼음.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 남북 철원 DMZ 및 접경지역에 걸쳐 호리병 형태의, 남측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함.
- 북측 땅에 위치하여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성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 남북한 인력이 DMZ를 오가며 교류하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경협을 추진함.
-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함.

(다)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현재 추진 중인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계기로 평화의 댐을 세계 최초의 평화댐문화공연장으로 전환·활용하고 그 일대의 평화조

형물과 더불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함.

- 평화의 댐과 임남댐(금강산댐)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평화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과 동시에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보전에 협력하는 동시에 상호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교류를 추진함.
  - 북한강 상류지역, 즉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세로로 가르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이제까지 DMZ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서로, 즉 가로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 북한강 상류지역을 시발로 하여 상호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생태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북-남의 세로형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하나씩 추진하고
    - 남북관계가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DMZ와 접경지역 전역에 걸친 가로형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라) 고성 유엔환경기구
- 남한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고, 남북 고성의 중간에 위치하며 현재 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

-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황사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과 수질·해양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문제해결과 공동협력의 동력으로 삼음.
- 유엔환경기구를 시발로 하여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 등을 유치하여 이 지역을 유엔환경평화타운으로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 유엔환경기구 소재지, 나아가 금강산 지역에 까지 환경 친화적인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의 연결로 이 지역을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으로 삼음.

## (2) 3대 중요사업

(가)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2013년 7월 27일 10시, 「정전협정」이 조인된 60주년을 맞아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우리측 주요 군전망대에서 DMZ 전역을 방송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함.
- 전 세계 시민들에게 DMZ의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 이를 위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소개함.
  - 신정부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를 고려함.

(나) 유해발굴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서 DMZ 내 특정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으로 인해 숨진 모든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함.
  -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및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의 참여도 추진함.
  
- 우리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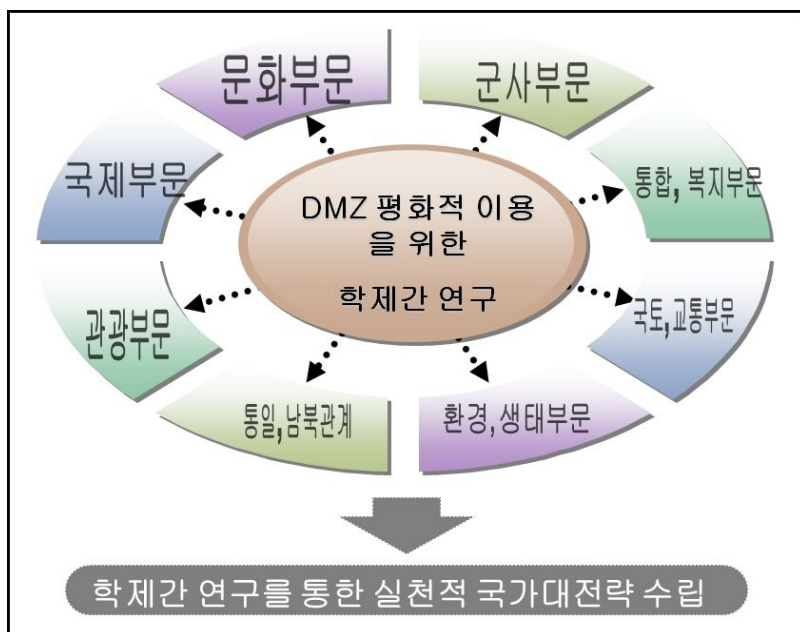
(다) 유엔평화병원

- DMZ내에 위치한 남북의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에 유엔평화병원을 건립하여 남북한 주민은 물론, 남북한 군인들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화해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들.
  
- 병원은 양방과 한방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구성하며, 북한 의료 인력의 교육 및 상호 공동연구의 추진 등으로 확대함.

다. 연구 방법

- ‘총합적 공동연구’(산·학·연, 민·관·군)로 추진함.
  - DMZ 지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 남북한은 물론 국내외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되

- 국책연구기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NGO,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면서
  - 모든 사안에 대해 함께 모여 모두 동시에 토론하는 총합적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제시되는 정책방안의 전문성,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함.
- 통일연구원이 운영하는 「코리아접경포럼」과 통일연구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DMZ학회», 「코리아DMZ협의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함.



Ⅱ 그림 1-1-2 Ⅱ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총합적 공동연구

-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남북워크숍을 개최함.
-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해 북한과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을 주제로 남북워크숍을 2012년 6월 독일에서 개최함.

-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이하 WCC)에 참여함.
  -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WCC에 참여하여 “DMZ 생태적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워크숍 및 언론홍보를 개최함.
  
-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워크숍을 개최함.
  - DMZ 평화적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 2012년 8월 및 10월 철원군, 10월 화천군과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함.
  
- 관련 국제사례를 현장연구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함.
  - 구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현장을 답사하고
  - 「코리아DMZ협의회」와 협력하여 2012년 10월 핀란드-소련/러시아 및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들간 국경지역 평화적 이용사례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 라. 기대효과

- 현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실천되지 못하였던 국정과제를 국가전략적 차원으로 격상하여 제시함.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환경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경기도, 강원도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임.
- 신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시에 적극 활용될 것임.
  - 국가 성장동력 확보, 남북한 동반 성장, 녹색성장, 민족동질성 제고,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통일의 준비는 물론 통일 유인·촉진에 기여하는
  - 국가전략 및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임.
- 신정부의 국가전략으로 채택될 경우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를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환경이 화합하는, 평화·화해의 상징지역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평화 이니셔티브로서 국가적 위상을 강화시킬 것임.

## 2.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개념

### 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

- DMZ의 평화적 이용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한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함.
  - DMZ의 평화적 이용의 전략적 이점은 한반도 평화안정, 상생공영,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 향후 DMZ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협력방안들이 국가전략사업

으로 가시화될 경우, 거시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중심이 DMZ 지역으로 이동하고 한반도가 지역 전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임.

- DMZ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지형의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은 기존의 국가정책과 차별화된 국가 전략을 고안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임.

○ 21세기 동북아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다자안보체제를 추구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노력은 동 체제의 구축을 추구하는 ‘촉진자’(Facilitator)와 미완성의 불균형을 유지하려는 ‘균형자’(Balancer) 간의 미세한 갈등과 경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과 군사력 강화 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군비경쟁은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문제 등의 문제 때문에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전개될 남북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임.

○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고려는 DMZ의 평화적 이용이 국가성장, 지역안보와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차원에 있어서 방법론적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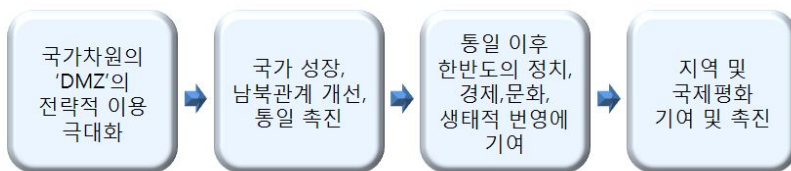
○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한반도내 신평화구조의 건설”이라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함.



## 나.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개념

- 국가전략의 본질적인 특성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임.
  - 국가전략의 의미는 “한 국가가 전략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하여 인식되는 국익의 실현을 추구하고, 아울러 국가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모하는 방안”임.<sup>2</sup>
-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DMZ의 평화적 이용이란 국가 성장, 남북관계 개선, 통일 촉진이라는 전 과정에서 ‘DMZ’의 전략적 이용을 극대화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번영과 생태적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국제적 평화정착과 상생공영에 기여함.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발전방향



Ⅱ 그림 1-2-1 Ⅱ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전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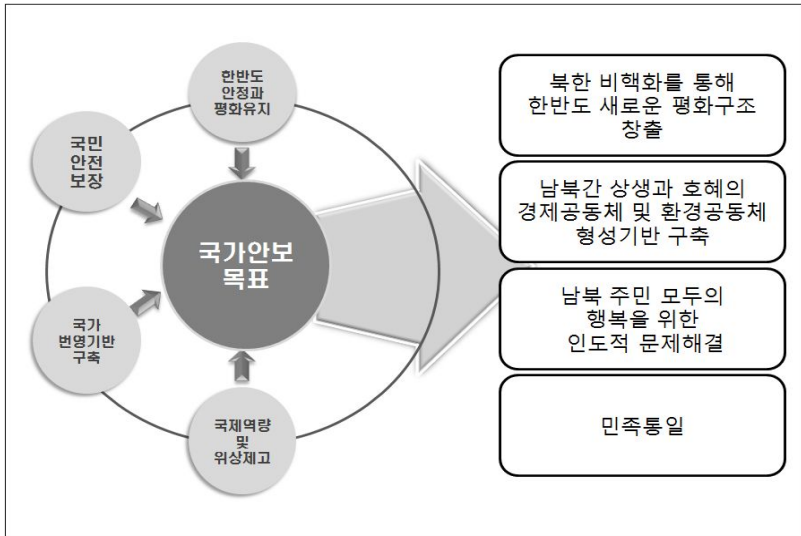
-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해야 함.
  - 구체적으로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 국민안전 보장, ③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④ 국제적 역량 및 위상제고 등임.<sup>3</sup>

<sup>2</sup>-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1~12.



Ⅱ 그림 1-2-2 Ⅱ 국가전략 차원의 국가안보목표

- 국가안보목표의 충족을 전제로 통일정책·대북정책을 활용하여
  - 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② 남북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 ③ 남북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 ④ 민족통일 등을 추진해야 함.<sup>4</sup>



Ⅱ 그림 1-2-3 Ⅱ 국가전략 차원의 국가안보 목표 및 중점사항

<sup>3</sup>-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pp. 31~34.

<sup>4</sup>- 통일부,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pp. 18~20.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사업 제안을 포괄함.
- 국가전략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까지 초점을 확대시키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함.
  - 국가지도자는 세계안보적 차원과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미래 국가상을 바라보면서
  - “(외교)정책을 결정할 시 상대국의 대응이나 국제관계의 파장뿐 아니라 국내정치 경쟁자들의 예상되는 대응도 고려하여 자신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sup>5</sup>해야 함.
-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국가성장, 상생공영, 민족통일 등의 필요가 반영된 DMZ의 평화적 이용은 범정부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전략으로서 정립되어야만 함.
  - 예를 들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허리에 놓인 DMZ에서 갈등과 긴장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 순간에 남북협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인 DMZ를 부분적, 제한적으로나마 평화적 이용하려는 전략적 접근 없이는 어떠한 남북간 협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음.

<sup>5</sup>- 김우상, 『신한국책략 II: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나남, 2007), p. 47.

## 다.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고려사항

- 국가전략 차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의 정립에는 우리 국가의 이념,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 매우 복잡적이고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요구가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는 한계도 극복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남과 북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에게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동 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임.
  
- 금강산관광 개발 등 일부 대북사업의 경우,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미 존재했음.
  -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비록 현대아산이라는 한국의 민간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지만,
  - 결국 사업의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었고, 박왕자씨 피살과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향후 사업에서는 우리의 국가적 이해가 분명히 반영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예산상의 문제 및 국민 정서, 당면한 남북관계를 볼 때 국가 전략 차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방안의 종류와 규모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되고 정련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을 포함하는 국가적 역량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분산되거나 낭비되는 상황을 조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국가전략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동 사업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MZ 평화적 이용 자체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국가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적, 남북관계적, 국제적 차원에서 명분과 이론이 제시되고 그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편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구체적 현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임.
  - 관련 남북한의 법·규정과 국제법의 분석을 토대로 DMZ 평화적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이 국내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라.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추진단계

- 국가전략 차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선적 고려사항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남북한 간 군사적 무력충돌의 가능성

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임.

-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는 남북간 DMZ에서의 무장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양측의 우발적인 충돌을 포함한 적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절차 및 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의 추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다만 세 단계가 단순히 시간적인 순차적 개념은 아니며, 동시에 복합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함.

### (1) 모색단계

#### (가) 남북간 신뢰건설 기획 창출

- 민약 무력충돌 회피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DMZ를 남북한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장소로 지정하여 양측의 신뢰건설을 위한 기반으로 삼음.

#### (나) 남북간 제 분야 공통분모 모색

- 우선 군사적 신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 구축을 위해 양측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양측의 우발적 무력충돌 제한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남북은 무장 제한을 포함한 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우발적 충돌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채택함.

- 이후 군사적인 분야를 넘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다) 남북간 신뢰회복 시도

- 남북이 신뢰회복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DMZ 관련 각종 사안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인력을 상주시킴.

### (2) 시행단계

#### (가) 남북간 교류협력 개시 및 확대

- 정치,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문화 등 남북이 상대적으로 쉽게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함.

#### (나) 남북 공동의 이익 식별 및 이익 강화 기회 확대 및 발전

- 남북이 상호 신뢰를 전제로 공동의 이익 확보와 확대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식별과 합의를 추진함.

#### (다) 남북간 협력을 통해 수익 창출 및 공유

- 남북이 협조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상호 협력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함.

### (3) 확산단계

#### (가) 남북간 문화적 동질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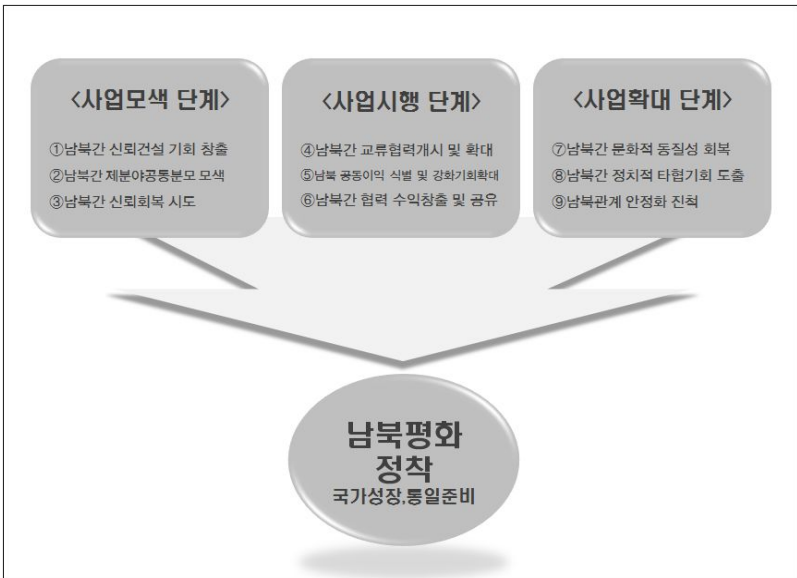
- 남북 간의 문화적 공통분모 인식, 동질성 제고 및 회복, 상호 사회와 체제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이 이루어짐.

(나) 남북간 정치적 타협의 기회 도출

- 이 단계에서는 DMZ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수준을 초월하여 남북이 합의하에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타협과 이로 인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확산됨.
- 이 단계에서 양측 합의도출 여부에 따라 미래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지형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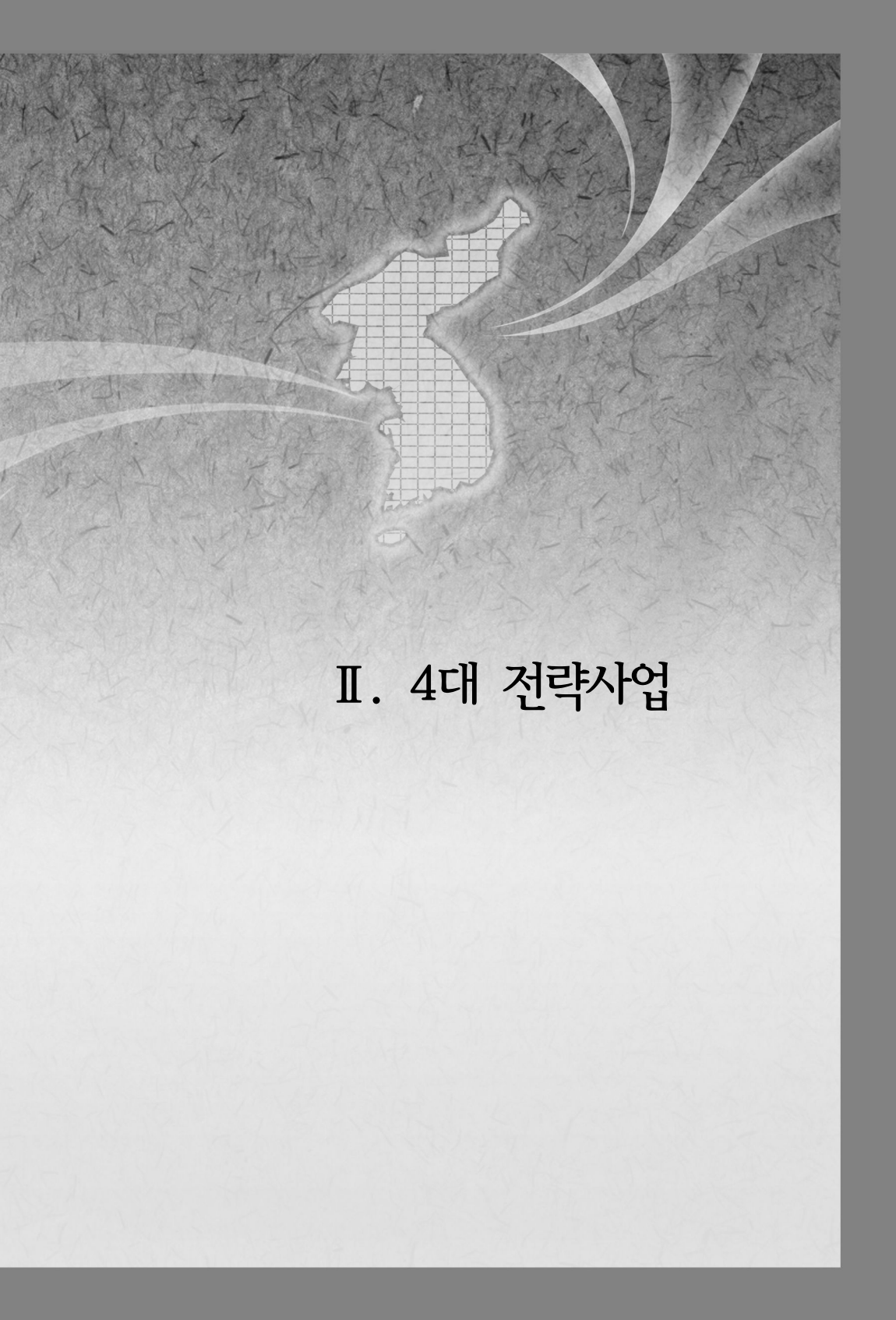
(다) 남북관계 안정화 진척

-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DMZ 평화적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가성장, 통일준비 및 축진이 이루어짐.



|| 그림 1-2-4 || DMZ 평화적 이용의 단계





## Ⅱ. 4대 전략사업



## 1.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가. 배경

- DMZ는 그 이용과 관련하여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 충돌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남북한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내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접경지역 지자체간, 시민사회 단체간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음.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DMZ 이용방안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사회적 통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6·25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의 평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도모하고,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마련이 요청됨.
  
- 파주 북방 접경지역 및 DMZ를 대상으로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문화타운이라는 평화와 희망의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도모함.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문화타운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 세계인들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

-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 관련국의 세계평화문화타운이 조성된다는 것은 현재 남북한 간 중무장지역인 DMZ를 평화와 협력을 위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짐.
- 문화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표상이 될 수 있음.

○ 국가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DMZ 평화적 이용은 무엇보다 국가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구상되어야 함.
- 낙후된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 지역 소외감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의 측면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발전대책 수립이 필요함.
- 평화문화타운 조성을 통해 연계되는 교통망의 확충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나. 목적

- DMZ의 미래비전 제시: 분단의 종착지에서 평화와 희망의 출발지로 전환함.
- DMZ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라면, 역으로 한반도 분단의 종식을 위한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6·25전쟁 모든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조성으로 DMZ의 미래비전 실현의 출발점으로 삼음.

- 전쟁발발 시 북한의 주공격로인 파주 서부전선 최전방에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으로써 DMZ를 군사대치지역의 단순한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한반도 상생공영을 위한 평화지역으로 전환 시킴.
  - 한국과 유엔참전국, 지원국 등 총 67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두 포함되는 평화문화타운 조성으로
  - 전쟁의 상징지역인 DMZ를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의 출발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함.
  - 6·25전쟁이 진영 간의 이념과 체제대결의 각축장이었다면, 세계 평화문화타운 조성으로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문화적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재편시킴.
  
- 평화 + 문화 + 생태환경 + 관광 등 복합적 의미의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참여국들의 평화 염원, 각국의 문화 홍보, 환경친화적 타운 조성, 관광과의 연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함.
  
- 세계평화문화타운이 소재할 파주 북방의 DMZ내에 남북한 모두가 숭모하고 동양평화를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이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

## 다. 의의

### (1) 정치적 측면

- 6·25전쟁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복합 평화문화공간의 건설로 상호 화해 및 평화공동체 형성의 정신을 구현함.
-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세계 유일의 전쟁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유엔기구 외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한 곳에서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공간이 될 것이고,
-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6·25전쟁으로 형성된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상징적 효과를 가질 것임.

### (2) 군사적 측면

- DMZ/접경지역에 평화문화타운의 조성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임.
-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접촉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여타 분야의 협력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임.
-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 공존의 관계로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감이 형성되어 DMZ의 비무장화, 군사력의 후방 배치, 나아가 군비통제 등의 논의가 수반될 수 있음.

### (3) 경제적 측면

- 세계평화문화타운을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해외관광객 유치는 물론, 평화문화타운에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확대시킴.
- DMZ/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연계하는 ‘생태문화관광’이 실현되는 장소로 조성함.
-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군사안보적 논리로 인해 낙후되었던 DMZ/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4) 문화적 측면

- 세계평화문화타운에서 세계인이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며, 문화공동체 형성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우리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60여 년간 형성된 남북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문화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참여국들이 다채로운 각 나라의 문화를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은 세계적 문화교류의 무대가 될 것임.
- 6·25전쟁 관련국이 모두 참여할 경우 지구상 최대의 국가가 한곳에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될 것임.

#### (5) 환경적 측면

- DMZ/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하여 타운 조성이 환경보호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함.

- 세계평화문화타운 자체가 인간과 인간이 화합하고, 인간과 자연 환경이 화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고 구성·운영되도록 함.
-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 시 환경생태적 보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임.

#### (6) 국제적 측면

- 6·25전쟁 관련국들의 참여로 DMZ/접경지역이 더 이상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갈등 지역이 아니라, 국제적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우호·협력의 공간이 될 것임.
- DMZ/접경지역은 직접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넓게는 유엔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지역으로서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은 어느 국가도 반대할 수 없는,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평화사업임.

#### 라. 주요 내용

- 파주 접경지역 및 DMZ, 그리고 북한측 접경지역 일대에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사진 II-1-1]과 같이 제1안(통일동산을 축으로 그 북방 접경지역 및 DMZ)으로 추진하되,
- 남북한의 군사적 요구로 실행이 어려울 경우 [사진 II-1-2]와 같이 제2안(한강하구 접경지역 및 DMZ)으로 추진함.





■ 파주 6.25 세계평화문화타운 (1안)



|| 사진 II-1-1 ||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제1안



### ■ 파주 6.25 세계평화문화타운 (2안)



■ 사진 II-1-2 ■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위치도 및 구상도: 제2안

- 6·25전쟁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유엔, 기타 지원국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 모든 국가들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참전 관련 전시관, 각국의 문화를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숙박 및 부대시설 등을 각각 세계평화문화타운 내에 조성함.
- 모든 시설은 각 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평화적 의미를 형상화하는 복합적 의미로 조성하여, 평화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인류공동번영의 시발점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 고려하도록 함.
- 각 국가 시설물에 담겨있는 국가별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개별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되 전 세계인의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함.
- DMZ의 생태적 의미를 고려하여 모든 건물과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함.
- 남북한의 합의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이 조성되면 그 중간에 놓인 DMZ 내에 남북한 모두가 숭모하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지역화함.
- 6·25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정치, 군사적 대립을 넘는 공통의 사상적 공감대 필요하며,
  - 이는 민족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사상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 남북 공동의 민족영웅이자 동양평화를 주창한 선각자이신 안중근 의사의 추모탑 및 기념관을 건립하여 남북한 긴장 극복과 신뢰구축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중심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일정 기간의 단위로 문화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 경우 구 미군 기지였던 ‘캠프 그리브스’가 그 역사적 의미, 평화동산·임진각·자유의 다리 등과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됨.

- 국내외 평화연구자, 활동가, 관련 단체들이 평화 관련 행사를 이곳에서 치룰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함.

## 마. 로드맵

### (1) 1단계

- 파주 북방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에 착수함.
  - 복합문화공연장(본관)과 참여국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을 각각 건립함.
-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하여 동 사업의 의미를 전달하고 동참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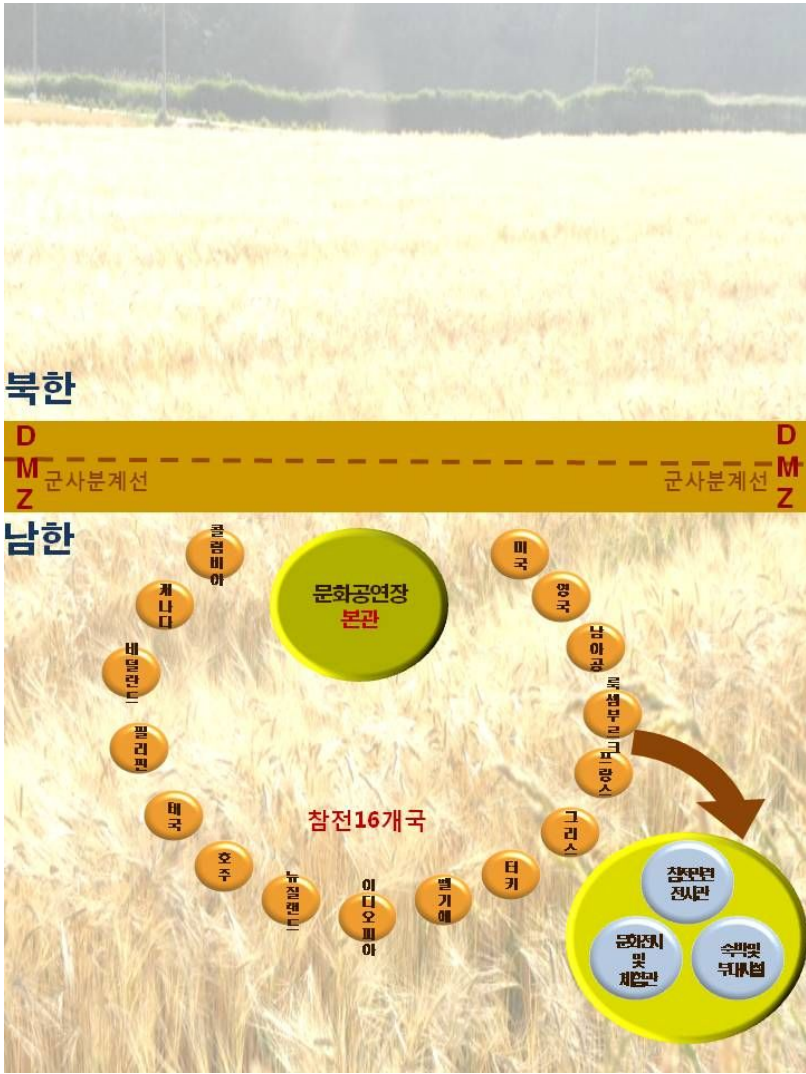
### (2) 2단계

-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6·25전쟁 관련 67개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평화문화타운을 확대시킴.
  - 참여국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및 평화·환경 관련 조형물 건립과
  - 환경생태적 부대시설을 조성함.
- 북한이 동 사업에 호응할 경우 북측 접경지역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참전 관련 전시관, 문화전시 및 체험관, 숙박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되, 남측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이 형성되도록 함.
  - 북한지역에 복합문화공연장(별관)을 건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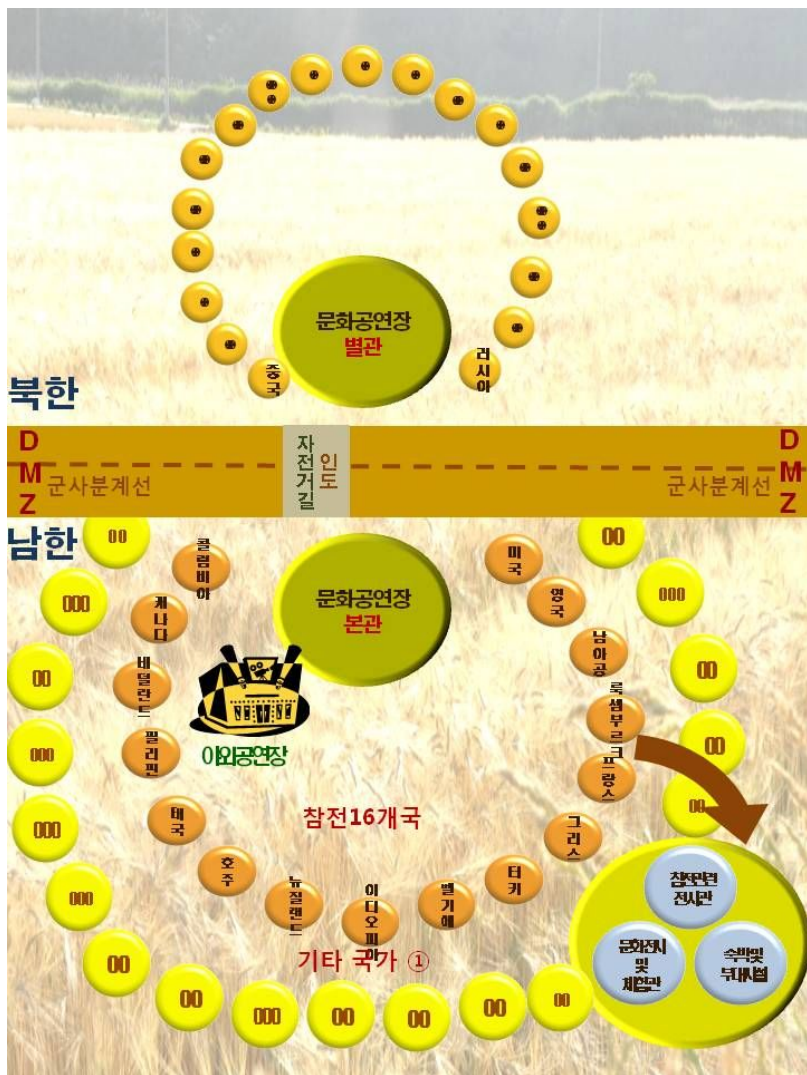
- 파주지역이 남북한 쌍방 간에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남북측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잇는 DMZ는 인력과 필요 물자가 오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만 개척하는 형태로 이용함.
  - 즉 남북측 접경지역을 DMZ가 잇는 호리병 형태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조성함.
- 남북합의에 의해 세계평화문화타운의 대상지역이 제1안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경의선 철도·도로를 활용함.
- 남북합의에 의해 세계평화문화타운의 대상지역이 제2안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DMZ 자체 내에 세계평화문화타운의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DMZ를 적극 이용함.
  - [그림 II-1-1,2,3] 참조.
- 만약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남측 파주 북방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확대·내실화 하되,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함.

### (3) 3단계

-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남북측 접경지역에 위치한 세계평화문화타운을 잇는 DMZ내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을 조성함.
  - 북측 지역에 야외공연장(별관) 및 평화·환경 관련 조형물 건립과 환경생태적 부대시설을 조성함.
  - 남북측 문화타운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노레일 혹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교통편을 운영하도록 함.



|| 그림 II-1-1 ||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1단계



Ⅱ 그림 II-1-2 Ⅱ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2단계



|| 그림 II-1-3 ||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3단계



## 바.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6·25전쟁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평화문화타운 조성을 통한 문화적 소통과 교류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도모하고,
  - 인류평화를 주도하는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함.
  
- 북한이 호응할 경우 한반도 평화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남북한 간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상호 화합할 수 있는 평화문화공간의 조성으로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평화정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지역민의 자부심 고양, 지역의 경제효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제고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함.
  - 이를 통해 접경지역-비접경지역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안중근 의사의 기념공원 건립으로 한국의 역사적 인물을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한국인의 평화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6·25전쟁 참전국들이 참여하는 평화문화타운 조성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시킬 것임.

- 보전과 개발간 통합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평화문화타운 조성의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 생태보전적으로 추진하여
  - 환경·생태적 보전과 개발·이용이라는 이중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통합모델로서 기능하도록 함.

## 2. 철원 평화산업단지

### 가. 배경

#### (1) 국내외 여건

##### (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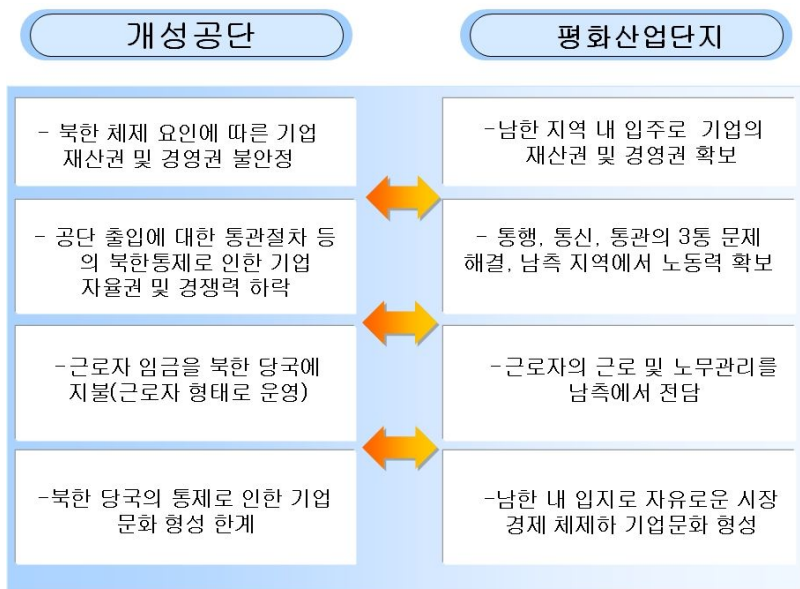
- 국내 산업이 초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ICT를 비롯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고임금, 고지가로 인해 제조 기업은 동남아 및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중임.
  - 하지만 이 지역 역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기준 강화,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국내 기반 기업 역시 저임금, 고숙련 인력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수급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별 언어 차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정책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 기업의 입장으로는 토지비용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면서 생산성이 월등하고 언어의 이질감이 없는 북한 인력 활용이 효과적임.
- 공단 조성비용에서 고지가는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을 고려할 때 수출입이 용이한 물류유통망의 거점 지역이면서 동시에 저렴한 토지비용 및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은 기업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투자지역임.
- 내수 시장 불황으로 인한 공단지역의 슬럼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 주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신경제전략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결국 한반도 경제성장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북한개발 및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평화산업단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

#### (나) 개성공단 운영 방식의 한계 보완

- 현재 남북경협 사업의 대표적 형태인 개성공단사업의 경우 북측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어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상황요인에 따라 기업 자율권 침해 및 경영권 불안이 존재하며,
  - 북한 당국의 통제에 의해 통행, 통관, 통신의 3통문제가 발생하고,
  - 기업 운영의 자율성 및 신속성 면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의 통신시설의 자유로운 운영이 기업운영의 핵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고 있음.

-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한산 표기는 기업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 제품 수출 시 다른 경쟁국의 수입 물품에 비해 높은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문제가 발생함.
  -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으로서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통행 제약이 따르는 북측 지역에 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가동설비 고장 시 서비스센터 부재로 수리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기존 개성공단 사업의 역개념으로서 북측 지역이 아닌 남측 지역에 중심을 두는 공단을 조성하는 형태임.
  - DMZ는 남북측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통로적 역할만 하도록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호리병 형태로 조성하되,
  - 남측 철원지역에 산업단지의 주요 시설이 들어서는 남측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 북측 근로자가 남쪽 철원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임.



Ⅱ 그림 II-2-1 Ⅱ 개성공단과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비교

(다) 동북아지역 공동체 이익 확대

-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남북한 자원공동개발사업, 에너지연결 사업, 금강산관광철도연결사업 등 남북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
- 평화산업단지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연동되어 추진되며, 중국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China Railroad: 이하 TCR, Trans Siberian Railway: 이하 TSR)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동북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가시화될 경우, 국제자본 유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동북아 지역 경제거점으로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
  - 동북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는 국

기간 안보협력 분야로 확대되어 동북아 신지역질서를 형성하는 평화네트워크로 역할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안보 차원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 따라서 평화산업단지 구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안보분야로의 협력구도를 확대하여 역내 공동이익을 추구함.

## (2) 국가전략 차원

- 남북관계 경색과 대결구도를 완화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기로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에 지난 60여 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한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전환하는 대국가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DMZ 및 접경지역을 중무장 지역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하여 한반도 미래를 설계해 가는 국가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대북 화해협력 메시지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DMZ 가치를 제고하는 국가전략 추진이 필요함.
  - 대결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남북한이 실현 가능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북측에

- 제안·추진할 필요가 있음.
- DMZ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을 직접 맞닿고 있는 군사요충지역으로서 공동협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실질적인 갈등과 대립구도를 완화해야 함.
  -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군사요충지를 경제협력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최전방 개념의 군사분계선을 후방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통일 한반도의 중추적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한 평화의 장을 조성하여 상생공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함.
    - 남북한 접경지역 대부분은 중무장한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임.
    - 접경지역에 접한 DMZ를 명실상부하게 평화지대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상생공영의 경험모델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남북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
  -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통일 이후 예측되는 남북간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가짐.

### (3) 지역적 차원

- DMZ를 평화와 화합의 남북관계로 이끌어내고 미래의 국토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평화공간으로 활용함.
  -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 적극적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유도함.
  
- 국토 균형발전 및 통일한반도의 중심축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을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심축에 위치한 곳에 경제, 산업, 문화 중심의 거점도시를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성공단의 한계점 극복을 통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함.
  - 현재 개성공단은 제품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조립 및 봉제 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술인력 양성에 한계를 가짐.

### 나. 목적

- 군사대치지역인 접경지역에서의 산업교류로 평화공존구조를 확립함.
  - 남북협력 산업단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평화정착기지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평화산업단지는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 전진기지로서 기능함.
  -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념적 대치지



역을 평화와 화해의 상징지역을 만드는 것으로서 남북협력의 상징성을 높여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대시킴.

- 통일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통일 한반도는 기존 남한의 경부축의 연장선인 서울-평양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대중국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평양·해주·개성 삼각축과 개성·인천·서울 삼각축의 개발이 예측가능한 가운데 국토의 서부축에 대한 대응으로 동부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통일 한반도의 전략적 성장축의 가능성이 높은 철원·원산·고성 삼각축의 기반조성을 의미함.
  - 또한 통일 시 북한 인구가 수도권에 급격하게 유입되는 것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내륙도시 및 접경지역으로서 고립된 철원의 지리적 요인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의 거점도시로서 기능을 전환함.
-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등 남북한 비교우위 자원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함.
- 한반도 통일시대 시 요구되는 북한 경제재건 인력을 양성함.
  - 북한 인력의 단순 고용이 아닌 기술교육을 비롯한 인력개발 및 인적교류를 확대함.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경제적 이익, 평화적 가치 제고, 남북관

계 진전 등 복합적 의미를 가진.

- Win-Win Zone: 남북한 비교우위 자원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출함.
- Peace Zone: 군사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
- Relation Zone: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만남의 장, 한반도 통합 시대를 여는 상호 인적교류의 무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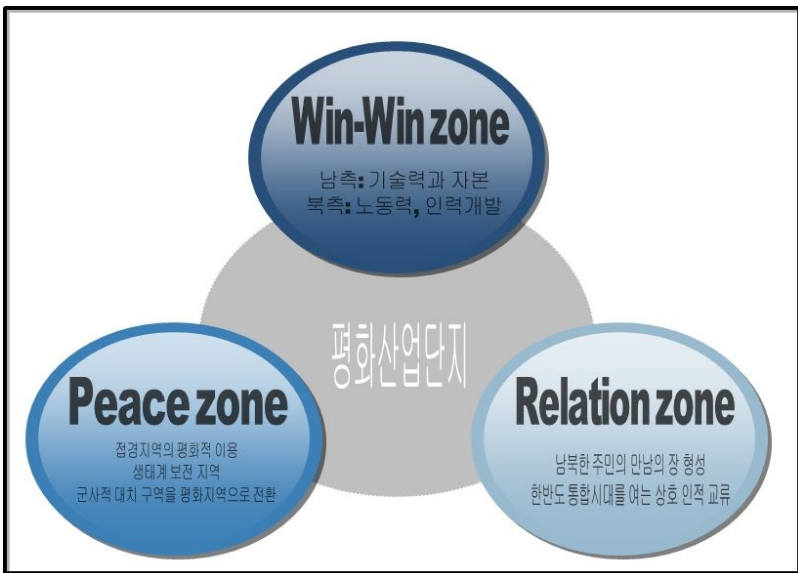


그림 11-2-2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의미

## 다. 의의

### (1) 정치적 측면

- 갈등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합으로 무대로 전환시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 DMZ를 중심으로 남북 철원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남북한의 인력이 교류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안정, 상호 이익 도출은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의 체험, 중국적으로는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음.

## (2) 군사적 측면

- DMZ를 중심으로 남북 철원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군사적 신뢰 회복과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남북 철원지역에 조성하되, 상호 군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남북 철원산업단지를 연결하는 DMZ는 인적·물적 자원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인 최소한의 면적만 활용하도록 함.

## (3) 경제적 측면

-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남쪽 철원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관리가 용이하고 3통문제도 해결되는 등 개성공단의 한계점 극복을 통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의 제시함.
-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발전, 통일한반도 시대 준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철도와 연결함.
  - 장기적으로 TCR, TSR과 연결을 추진함.

- 남·북·러 천연가스관의 연결 시 이 지역이 주요 통과지점이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산업단지조성은 가스관연결의 관리·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북한 재건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의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함.

#### (4) 문화적 측면

- 산업단지 내에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근무하는 남북인력이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질성을 줄여가는 무대가 되도록 함.
-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인근 DMZ내에 위치한 태봉국의 역사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함.
  - 남북관계 및 호응의 진전에 따라 생태문화관광을 실시함.

#### (5) 환경적 측면

- 철원지역이 생태보전 1등급 지역임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조성의 전 과정을 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함.
- 산업단지에 유치될 기업의 선정 시 녹색성장의 측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함.
- 산업단지 내에 환경보호와 생태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녹색성장과 DMZ의 생태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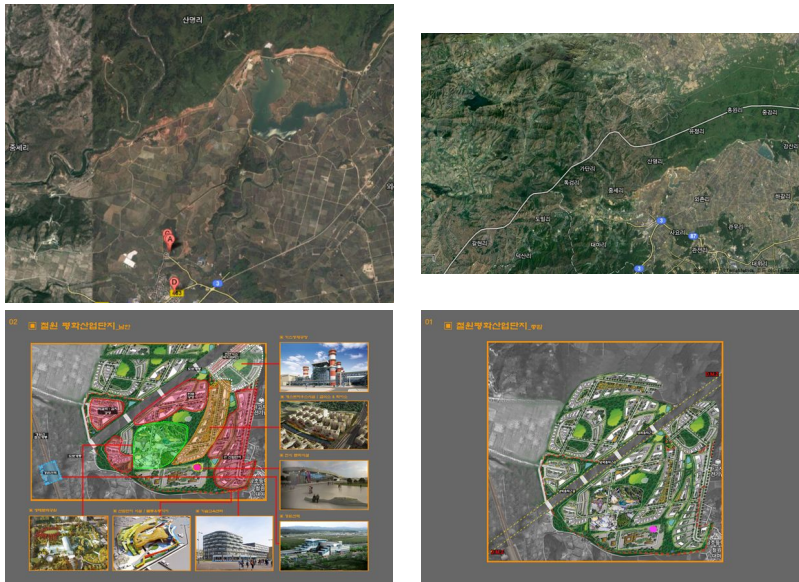
## (6) 국제적 측면

- 한반도의 중심에 놓인 철원에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동북아 전역에 평화안정이 제고될 수 있음.
- 철원을 통과하는 경원선이 연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TCR, TSR과 연계되어 동북아 물류운송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북·러 간에 천연가스관 연결이 논의되고 있는 바,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원산을 거쳐 철원을 지나는 가스관연계가 가장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이러한 가스관의 원활한 연계는 물론, 가스관연결지점의 관리·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라. 주요 내용

- 남북한 철원지역을 포함하되, 그 가운데에 놓인 DMZ는 인적·물적 자원의 통과가 가능한 정도로만 활용하는 호리병 형태의 철원 산업단지를 조성함.
  - [사진 II-2-1] 참조.
-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중심은 백마고지 전망대 일대의 남측 철원의 평야지대임.
  - 북측 철원지역에 위치할 평화산업단지는 남측 철원산업단지를 보완·지원하는 형태를 지니도록 함.
  - 북측 철원산업단지에는 남측으로 통근 형식으로 출·퇴근할 북측 근로자의 숙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함.

- 남측 철원지역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는 북측 철원지역에서 철도·도로를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남북 철원지역간 DMZ를 통과하는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함.
  -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 한 번에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 이를 명분으로 철도의 개통을 요구하고 향후 경원선의 복원과 연계함.
  
-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호응에 따라 경원선과 금강산선 연결, 천연가스관 연결로 사업을 확대함.
  
- 평화산업단지에 유치될 산업은 철원의 지역적 특성, 국가적 차원의 요구, 산업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청정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인근 태봉국 문화유적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을 실시함.
  
- 철원지역이 두루미 등 철새의 도래지임을 고려하여 남북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강구함.



■ 사진 II-2-1 ■ 철원 평화산업단지 위치도 및 구상도

## 라-1. 유치업종

### (1) 유치업종 선정 기본원칙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이 갖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  
되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① 평화산업단지 조성의 정책적 요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② 철원지역 및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지 여부
  - ③ 이 지역(강원도 및 철원군) 산업 유치 관련 국가의 개발방향  
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유치업종

- 이상을 고려한 결과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우선적 유치업종은 섬유(봉제의복 제외), 농식품가공, 기계(농기계), 화학(비료), 관광, 물류유통, 첨단(바이오, 신소재 등)산업 등임.

표 II-2-1 철원평화산업단지 유치업종

선정방법	제시 업종	우선 순위	업종선정
평화산업단지 특성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기계(농기계), 화학(비료공장), 전자산업, 통일관광산업, 남북한 물류유통산업	1	섬유(봉제의복 제외), 농식품가공, 기계(농기계), 화학(비료), 관광, 물류유통, 첨단(바이오, 신소재 등)
지역(경제) 특성	첨단산업(생명과학, 바이오, 신소재 등), 농식품 가공 산업, 관광기념품 제조업종, 물류유통산업	2	
기존계획	농업 및 물류유통, 첨단신소재, 통일관광	3	
산업현황분석	음·식료품, 섬유(봉제의복 제외), 의료·정밀기기, 펄프 및 종이,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목재, 비금속광물	4	

## 라-2. 에너지 공급

### (1) 주력 에너지공급방안

#### (가) 전력공급

- 철원 평화산업단지 내에 공단전용 변전소 건설을 추진함.
  - 현재 철원변전소는 지역의 기존 전력수요를 담당하게 하고 평화산업단지에는 별도의 변전소를 건설하여 신규수요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설 변전소는 산업단지와 남북협력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량 확장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함.
-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경우, 특별히 전력다소비 업종이 주력업종으로 입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단 전용 변전소는 45/60MVA, 2Bank로 시작하고, 추후 입주기업과 전력수요가 커지면 변압기 대수(Bank)를 늘려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정함.

#### (나) 열 공급

- 열 공급방안으로 공단전용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함.
  - 석탄을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도입 타당성은 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나,
  - 가스터빈의 경우는 설비규모의 설정이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입주 업종에 크게 제약받지 않음.
- 입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별 에너지 수요를 조사, 적정규모의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를 설계함.
  - 민간 열 병합 사업자가 공단 내에서 열, 전기의 수용가를 확보하여 설비를 갖추고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다) 북측 철원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이 남쪽으로부터의 배전선 연결 방식으로 이루어졌듯이 철원 평화산업단지의 경우도 북측 지역을 북한 전력시스템으로부터 격리하고 남쪽으로부터 배전망을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적정함.

## 마. 로드맵

### (1) 1단계

- 철원 평화산업단지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되,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측 철원지역에 대북 지원용 시설을 설치함.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 비료지원이 지속될 것인 바, 대북지원용 비료생산시설을 남측 철원지역에 건설함.
  - 이 시설물이 지속적인 대북지원용임을 설명하고 이를 북측에 인도할 통로의 개척, 즉 DMZ를 통과할 도로의 개설을 북한에 요청함.
  - DMZ를 거쳐 대북 비료지원이 시행될 경우, 북측 철원평야를 대상으로 하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을 추진함.
  - 대북지원용 비료생산 시설은 최대한 환경오염이 적은 바이오 비료를 중심으로 하되, 화학비료의 생산에서도 환경적 고려를 우선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함.
  
- 비료생산에 따른 환경적 우려가 크다면 남측 철원지역에 대북지원용 농기계 생산시설을 건설함.
  - 역시 농기계의 대북지원을 명분으로 북한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는 DMZ내 통로의 개설을 요구함.
  - 농기계의 지원과 아울러 북측 철원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남측 철원산업단지를 형성해 감.

- 만약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이 단계에서 가시화 된다면 북·러 국경에서의 가스관 연결사업의 시공과 동시에 남북 철원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의 시공을 남북 철원 DMZ에서도 착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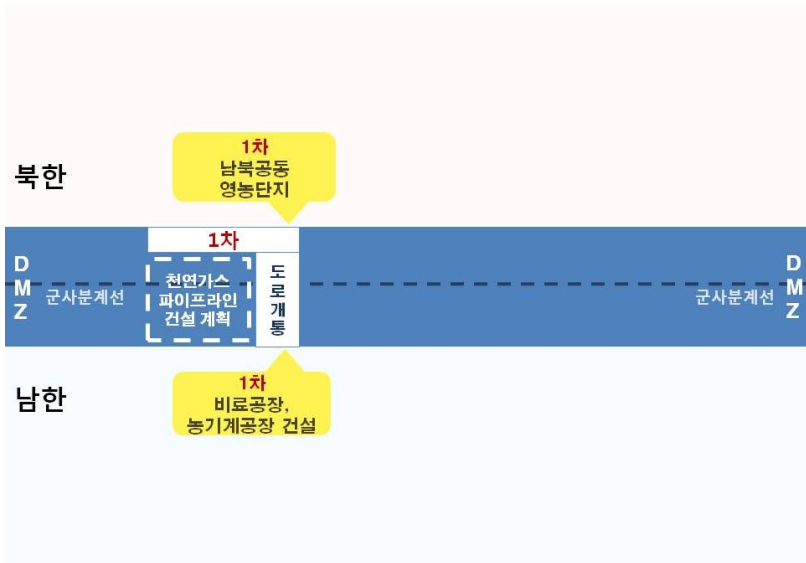
## (2) 2단계

- 남측 철원산업단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외에 청정IT산업을 유치함.
- 북측 철원지역에도 청정IT산업의 일부 기업, 북한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조성함.
- 북측 근로자의 남쪽으로의 출·퇴근을 위해 개척된 DMZ 통로를 확대하여 철도·도로를 부설하고, 통근 기차·버스를 운영함.
-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이 북한 내에서 본격화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재와 시설물을 남측 철원지역에 배치함.
- 동시에 남북 철원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를 경원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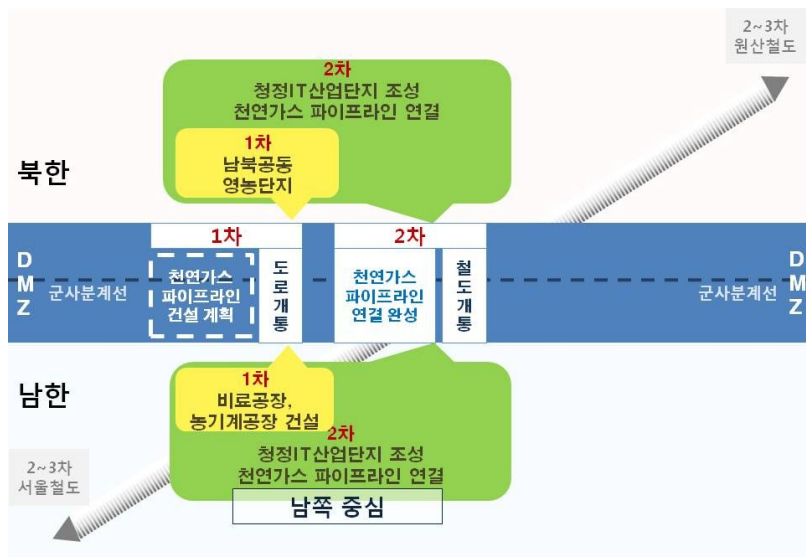
## (3) 3단계

- 남북측 철원지역에서 평화산업단지의 운영을 본격화함.
- 경원선 연결과 아울러 금강산선의 복원도 추진함.

- 천연가스관의 연결도 적극 지원하여 DMZ에서 원산을 거쳐 북·러 국경지역에 이르는 전 공사를 지원함.
- 남북 철원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생태 문화관광을 실시함.



|| 그림 II-2-3 || 철원 평화산업단지 1단계



Ⅱ 그림 II-2-4 Ⅱ 철원 평화산업단지 2단계



Ⅱ 그림 II-2-5 Ⅱ 철원 평화산업단지 3단계

## 바. 기대효과

- 남북한의 상호 비교우위자원의 결합으로 국가성장을 위한 신동력을 창출함.
-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는 기존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남측에 공단을 조성하고 북측 인력이 남한으로 출퇴근하는 형태의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을 제시함.
  - 원산지문제 해결 및 남측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 북한의 장기적 경제자립 지원 등의 효과를 창출함.
- 국토의 중간지점에 남북이 협력하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의 효과를 가짐.
- 남북한 경제·생태·문화 협력으로 남북한 공동번영을 실현함.
-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함.
  - 평화산업단지 건설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을 대비한 완충지대를 마련함.
  - 남북주민 간 이해를 증진시켜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됨.

### 3.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가. 배경

- 북한강 상류지역은 DMZ의 청정자연 활용과 생태·평화관광지 조성의 최적지임.
  - 북한강 DMZ 남방한계선 오작교 초소에서부터 평화의 댐까지 10km 사이는 원시적인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두루미와 저어새, 삿, 금강초롱 등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2,71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임.
- 북한강 상류지역의 생태·안보 상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국민가곡 ‘비목’의 탄생지인 백암산, 북한강 DMZ에 놓인 오작교, 북한의 수공위협으로 건설된 평화의 댐, 세계분쟁지역의 탄피를 모아 만든 평화의 종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북한강 상류지역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고 무질서·무계획적인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용방안 마련이 요청됨.
- 북한강 상류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국제적인 개념에 따라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북한강 상류지역을 국제적인 로드맵에 맞게 조성하여 분단의 대가로 얻은 귀중한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며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함.

- 북한강 상류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맞추어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열망에 부응할 뿐 아니라,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위해서도 필요함.
- 북한강 상류지역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낙후되었던 접경지역을 UNESCO의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함.
  - 북한강 상류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산재한 평화안보 관련 자산을 생태문화관광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나. 목적

- 평화의 댐과 임남댐(금강산댐)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이 호수공원을 남북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금강산댐의 건설을 계기로 북한이 북한강 상류지역의 하천수를 동해의 안변청년발전소로 흐름을 변경함으로써 남측 평화의 댐으로 내려오는 하천수의 유량은 급격히 감소되었음.
  -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 사이에 호수가 형성될 정도의 하천수량만큼의 방류를 북한측에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
  - 조성된 평화생태호수공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함.
- 북한강 상류지역 DMZ내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세계적인 평화·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함.

- DMZ는 지난 60여 년 동안 민간인의 침입이 배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으로 파괴된 자연이 어떻게 복원되는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생태복원 모델 지역임.
  - DMZ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학자들은 DMZ를 ‘지구촌의 생태계 보물’로 간주하고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은 DMZ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문화·생태적 활동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상생공영 그리고 남북협력사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및 한반도 환경보전체제 구축에 기여함.
- 북한의 협력 없이는 북한강 상류지역의 일정 유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댐의 저수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함.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극심한 강우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4년까지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남북이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 북한강 상류는 소양강댐과 더불어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젖줄인 만큼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수중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음.
  - 북한강 상류지역의 하천·천변 연계를 통한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간 교류협력사업은 끊어진 물길을 이음으로써 북한강 상류지역의 자연생태계보호는 물론 남북이 협력하는 환경보전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 댐으로 막혀있던 북한강 물줄기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연결되면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 기상재해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재해 공동대처로 한반도 국토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북한강 상류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 연결을 추진함.

- 북한강 수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연계는 북한강의 수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임.

○ 북한강 상류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

- 이제까지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던, DMZ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동에서 서로 이르는 가로형 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 북한강 상류지역에 조성된 평화생태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에서 남으로 이르는 세로형 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그 실천성을 제고시킴.

○ 북한이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에 호응하기까지 우선 평화의 댐을 세계 최초로 댐을 활용하는 평화댐문화공연장으로 조성하고 인근의 평화조형물과 연계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적 상징지역으로 자리매김함.

- 평화와 환경을 상징하는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여 평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사회에 소개하고,
-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

## 다. 의의

### (1) 정치적 측면

- DMZ 일대에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으로 남북한 긴장의 완화와 남북협력의 기틀을 마련함.
- 평화담문화공연장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평화 의지를 과시할 수 있음.
  -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분단 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평화의식을 고양함.

### (2) 군사적 측면

- 평화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이를 통해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북한강 상류지역이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지역의 평화지대화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3) 경제적 측면

-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화생태호수공원을 생태문화관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 호수 조성에 필요한 하천수의 방류에 대한 대가를 획득할 수 있음.
  - 북한강 상류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평화댐문화공연장 조성으로 평화생태문화관광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 발전, 국민 안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4) 문화적 측면

- 북한강 상류지역에 조성될 평화생태호수공원에서 남북이 함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공연, 문화활동을 추진하여 상호 공감대를 높이고 이질성을 줄여가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음.
- 평화의 댐을 댐문화공연장으로 조성하여 평화·생태 관련 문화공연을 진행함으로써 평화염원과 생태보전을 위한 체험의 공간으로 만듦.

#### (5) 환경적 측면

-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을 평화·생태·지역개발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태보전에 기여함.
  - 북한강 상류지역 일원의 어떠한 사업도 개발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됨.
  -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주요 동·식물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지역과 원충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제적 시각에 맞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함.
  -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평화·생태·지역개발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제시함.

- 평화생태호수공원 내에 한반도생물자원관을 건립하여 DMZ 및 이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태보전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6) 국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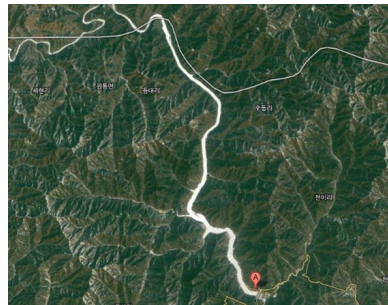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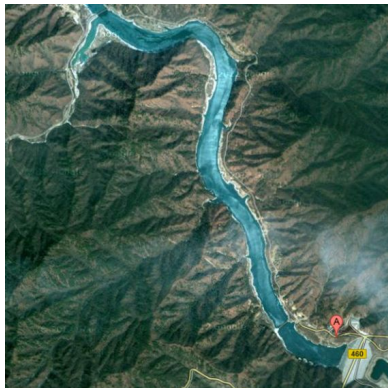
-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북한강 상류 DMZ 및 접경지역의 원시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평화담문화공연장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평화의 상징지역화 함으로써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과시할 수 있음.
- 생물자원 관련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생물자원관의 건립은 한반도 생물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짐.

### 라. 주요 내용

#### (1) 평화생태호수공원

- 평화의 담과 금강산담 사이를 평화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남북한이 평화·생태·문화관광적으로 활용함.
- 평화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평화의 담 수량 확보가 필요함.

- 북한은 금강산댐 건설로 확보하고 있는 담수량 가운데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만큼 일부만을 남쪽으로 방류함으로써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임.
  - 남한은 ‘Water-Trade’ 개념에 입각하여 대가를 지불하되 국민적 정서에 맞도록 현금 지급은 지양함.
- 북한에서 흘러온 물로 자연스럽게 호수가 조성됨으로써 ‘평화생태호수’라는 스토리텔링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임.



북한강상류 평화생태 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505 전망대

트레인(미크트렐, 케이블카)

중간정거장 & 전망대

505

오악교

민기버스

오노세일

경주호수

오노세일

평화의섬

남북복합문화센터

남북복합문화센터 및 수상공연장

원반도 생물자원관 & 오노세일

평화의섬 수상공연장

■ 사진 II-3-1 ■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위치도 및 구상도

\*출처: 전기버스 <<http://www.nemopan.com/files/attach/images/2630/420/372/003/친환경-전기버스.jpg>>; 트레인(상) <[http://pds14.egloos.com/pds/200901/28/72/a0105672\\_497fbd1fd56e0.jpg](http://pds14.egloos.com/pds/200901/28/72/a0105672_497fbd1fd56e0.jpg)>; 트레인(하) <<http://www.autochunk.com/wp-content/uploads/2012/06/Cabrio-worlds-first-open-cable-car.jpg>>; 컨벤션센터시설 <[http://korean.visitkorea.or.kr/kor/ut/where/worthy/worthy\\_list.jsp?cid=334801](http://korean.visitkorea.or.kr/kor/ut/where/worthy/worthy_list.jsp?cid=334801)> 그림 참고하여 편집.

## (2) 평화댐문화공연장

- 평화의 댐을 활용하여 전 세계 최초로 댐을 활용한 문화공연장을 조성함.
  - 평화의 댐 남쪽 경사면이 관람석, 파로호 북측 댐 하부 양쪽 돌출부를 인공육교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무대시설을 조성함.
  - 현재 진행 중인 평화의 댐 보수·보강공사와 병행하여 평화댐문화공연장을 조성함.
  
- 이미 조성된 평화의 댐 주변의 평화조형물과 연계하여 이 지역을 세계평화의 상징지역화 함.
  - 평화문화공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부상할 것임.
  
- 북한강 상류지역에 남북한의 합의로 평화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되면 평화댐문화공연장에 남북이 함께 합동으로 문화공연을 실시함.
  -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임.





■ 사진 II-3-2 ■ 평화담문화공연장



■ 그림 II-3-1 ■ 평화담문화공연장

### (3) 한반도생물자원관

- 세계평화생태호수공원의 남쪽 지역에 한반도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여주고 연구할 수 있는 한반도생물자원관을 건립함.
  - 백두대간을 이루는 산악지형과 북한강 수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북한강 상류지역은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들이 만나는 한국의 ‘하천자연사 박물관’임.

- 한반도생물자원관은 북한강 상류지역뿐 아니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모든 생물자원을 전시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화천군에 이미 설립된 수달연구센터와 연계하여 동·식물의 서식 생태 연구, 서식지 조성 및 복원 등을 추진함.
- DMZ/접경지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써 역할을 하도록 함.
- 향후 북한강 상류지역이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관리사무소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음.
- 한반도생물자원관이 평화댐문화공연장 인근에 연계하여 건립된다면 주변의 평화조형물과 더불어 이 지역은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할 수 있음.

#### (4)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은 국경을 접한 2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생물권 보전지역 개념으로 프랑스-독일 ‘Vosges du Nord-Pfälzerwald’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14개국에 8곳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2011년 9월 DMZ의 남쪽지역과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북한의 반대 등으로 거부되었음.
  - 비록 DMZ 남쪽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북한은 DMZ 전역이 「정전협정」의 대상 지역이므로 그 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필수적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DMZ의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노력은 의미가 없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선정과 추진방법을 통해 북한의 동의할 수 있는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기존의 가로형 형태의 동에서 서로 이르는 전 DMZ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세로형 형태의 북에서 남으로 이르는, 특히 상호 군사적 시설의 배치가 적어 부담이 적은 북한강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이 경우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과 평화생태호수공원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강 상류지역과 백암산, 평화의 댐 일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도움이 될 것임.

- 북한강 상류지역의 평화생태호수공원이 UNESCO에 의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DMZ 지역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높고 지역주민이 열망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북에서 남으로의 세로형 형태의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함.
  - 중국적으로 이들 세로형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을 가로로 연계하여 UNESCO에 전체적으로 단일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함.

## 마. 로드맵

### (1) 1단계

-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 사이에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의 의지를 공표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함.
- 북한의 호응과는 무관하게 평화의 댐에 평화댐문화공연장을 건립하고 이 지역을 평화의 상징지역화 함.
  - 홍수기를 피하여 연간 2~3개월에 걸쳐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 그 외의 기간은 평화댐문화공연장을 관광지로 활용함.
- 평화의 댐 주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문화관 우측에 한반도 생물자원관을 건립함.
- 북한강 상류지역 오작교 하류의 우리측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을 준비하기 위한 생태보전사업을 실시함.

## (2) 2단계

- 북한이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에 호응할 경우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
- 평화생태호수공원 일대를 탐방할 수 있는 접근로를 개척하고, 가능하다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예를 들어 모노레일 혹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함.
- 이 지역을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남북이 협력하여 시작함.

## (3) 3단계

-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생태호수공원 일대를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함.
- 평화담문화공연장에 남북이 합의하는 내용의 문화공연을 공동으로 진행함.
- 한반도생물자원관에 북한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남북이 협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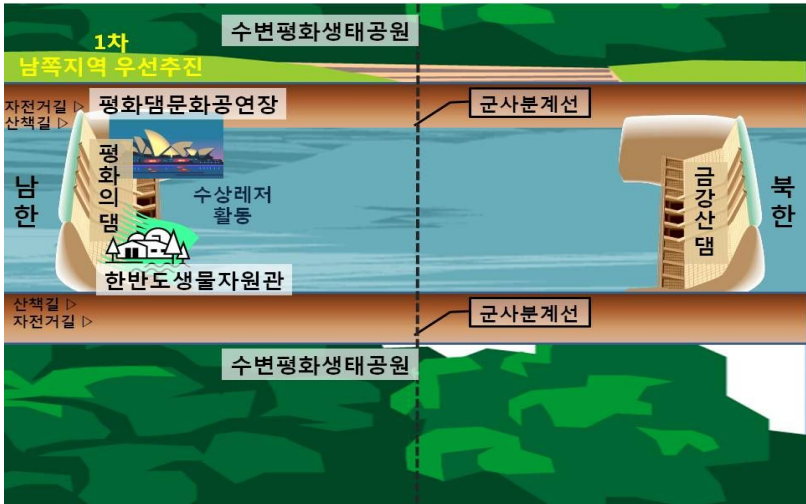


그림 11-3-2 |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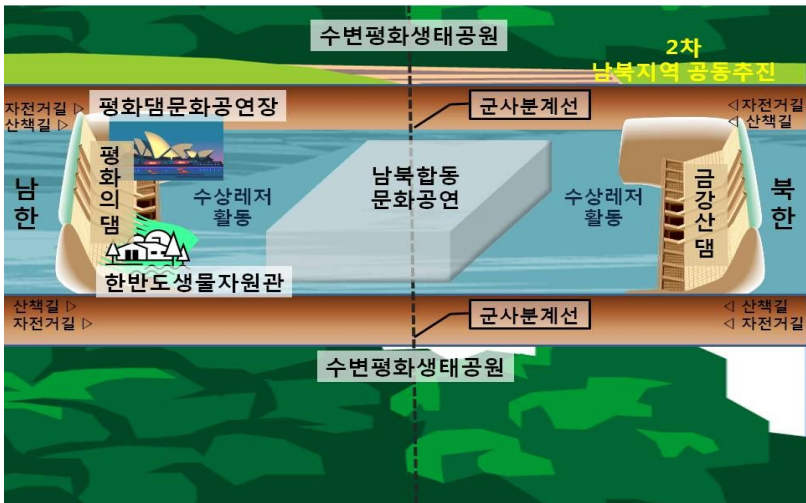


그림 11-3-3 |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2단계



그림 11-3-4 북한강 상류지역 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3단계

## 바. 기대효과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평화의 성지가 될 것임.
  -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북한강 상류지역에 평화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 평화담문화공연장 건립과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공연, 친환경적 건축과 재생기능에너지 사용 그리고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은 군사지역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세계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임.
  - DMZ/접경지역의 관광지화는 북측 접경지역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함.

- 세계적인 평화생태관광의 명소가 될 것임.
  - 평화생태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강 상류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의 모델이 될 것임.
  
- 지역주민 자긍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평화생태호수공원과 평화담문화공연장의 조성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계될 것이며,
  -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임.
  
-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함.
  - 평화담문화공연장에서 남북한의 합동 공연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금강산관광지의 경우 우리측 관광객이 북측지역을 방문하여 북한의 문화공연을 체험할 수 있었던 반면에 평화담문화공연장의 경우 우리측 지역에서 북한의 문화공연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음.



## 4. 고성 유엔환경기구

### 가. 배경

- 현재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모두 황사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과 수질 및 해양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 그러나 환경오염 원인제공국과 피해국 간의 입장 차이,
  -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과 정치체제 상의 뚜렷한 차이,
  - 환경오염 자체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 모두 에너지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임.
  -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가 희생하여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을 대규모로 사용할 경우, 황사와 더불어 한반도는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에 놓일 것임.
- 결국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력 창출이 필요한 상황임.
  - (포스트)「교토의정서」의 이행,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구심적 역할이 필요함.

### 나. 목적

- 강원도 남북 고성군 가운데에 위치한, 설악산국립공원과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는 DMZ지역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하고, 그 권

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환경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활용함.

-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를 갈등의 상징지역인 DMZ내에 유치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인함.
  -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적 호응에 맞추어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 등의 건립으로 확대함.
  -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유엔관련 기관들은 주로 행정관련 업무나 사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반면,
  - 유엔대학교와 유엔연구소는 본격적인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해 평화정신과 생태의식의 확산 및 문제해결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학자, 대학생 등 고급 인력이 DMZ 및 남측 접경지역에 상주하고 활동함으로써 세계인에게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평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케 할 수 있음.
  
- 유엔기구의 유치로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강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에는 동북아 및 세계 평화 유지와 번영 그리고 환경보호·개선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함.
  
- 유엔환경기구 소재지에 대한 육·해·공로의 교통편을 연결하여 동지역을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킴.

## 다. 의의

### (1) 정치적 측면

-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에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공존공영,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
  -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결의에는 반발하고 있으나, 대북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타 유엔기구와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함.
- ‘21세기의 화두’인 환경문제에 남북한이 선도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함.

### (2) 군사적 측면

-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인 DMZ 내이지만 현재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지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점에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의 이동·변화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항구적인 긴장완화, 전쟁억제, 평화유지의 효과를 얻음.
- 주한미군의 감축, 향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견될 수 있는 유엔사령부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DMZ내 유엔기구의 존재는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3) 경제적 측면

- DMZ에 평화를 상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할 유엔환경기

구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한반도의 공존공영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보여주어 남북한의 대외적 경제 신인도와 안정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임.

- 국제기구로서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남북간의 육로, 공로, 해로 등 교통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이 교통로는 유엔기구란 국제적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항구적 통행이 보장되어,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는 안정성 있는 교통망의 연결이 구축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물론, 동북아 차원에서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임.
  - 강원도 양양-속초-고성지역이 환동해권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와 남북한의 설악-금강산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생태관광이 실시될 경우 경제적 실리는 더욱 커짐.
- 결국 DMZ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DMZ 평화적 이용의 기폭제가 됨.

#### (4) 문화적 측면

- 유엔환경기구의 모든 활동이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엔환경기구의 소재지는 물론 DMZ 전역의 문화유물·유적의 보존·관리에 기여함.
- 유엔환경기구, 유엔대학교, 유엔연구소의 소재지가 다양한 국내·

국제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됨.

- 상주하는 전세계의 인력이 상호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음.

#### (5) 환경적 측면

- 생태적 보고인 DMZ에 유엔환경기구가 들어서고 모든 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전개됨으로써 DMZ내 환경보호·개선은 물론, 한반도 나아가 지역의 환경보호·개선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침.
- 유엔환경기구의 설치와 연계하여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환경캠프의 설치, 각종 국내·국제환경행사의 진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 DMZ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함.

#### (6) 국제적 측면

- 중무장지역인 DMZ에 평화를 구현하려는 유엔기구가 유치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변영에 기여함.
  - 특히 주변국의 경우 현 정치·군사적 상황의 변화 없이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담보 받을 수 있음.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이후 예상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 시에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함.
- 유엔기구의 유치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보되어 동북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역내 경제산업체제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및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함.
  - 서해는 이미 유엔이 지정한 오염해역이며, 현재 황사 등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임.
  - 북한의 경제가 희생하고 중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석탄의 소비가 급증할 경우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은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평화와 환경을 위한 지역적·세계적 문화공간이 조성됨.

## 라. 주요 내용

### (1) 유엔환경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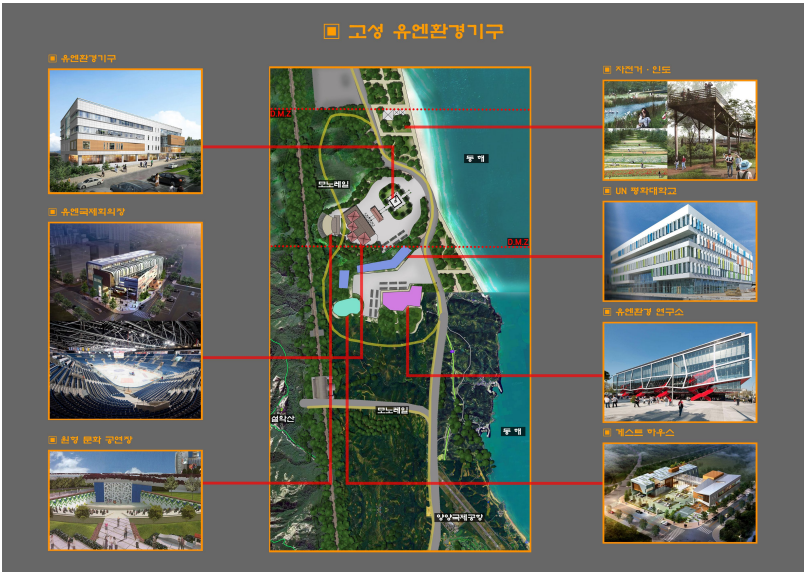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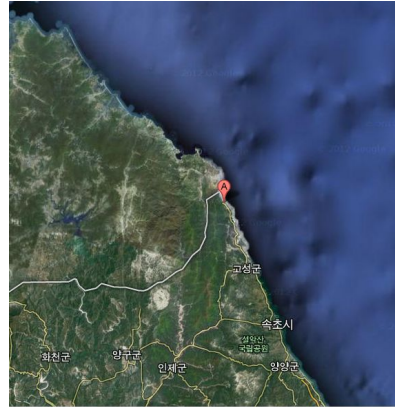
- 남한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이 만나면서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지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남북 고성군의 중간에 위치한 DMZ내에 유엔환경기구를 유치함.
  - [사진 II-4-1] 참조.
  
- 유엔환경기구 유치는 ① 기존의 환경관련 유엔기구의 소재지를 고성으로 이전, ② 기존 유엔환경기구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독립하여 그 사무국을 고성에 유치, ③ 새로운 유엔환경기구를 설립하여 고성에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어려우며,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로 포화상태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일부 기능, 특히 현재 동북아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분야를 고성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2) 유엔연구소 및 유엔대학교

-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호응에 맞추어 남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의 본관을 건립함.
  - 북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유엔평화연구소, 유엔환경대학교, 유엔평화대학교의 분소와 분교를 건립함.
  
- 유엔연구소와 대학교에는 평화와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계적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시킴.

## (3) 생태평화공원

- 유엔기구 소재지 일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함.
  
- 유엔환경정상회의나 기타 평화·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유엔회의 및 국제회의를 유치함.
  - 환경캠프, 평화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생태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 Ⅱ 사진 Ⅱ-4-1 Ⅱ 고성 유엔환경기구 위치도 및 구성도

\*출처: 유엔환경기구 <[http://cancer.snuh.org/upload/attach\\_file/2011/03/22/bon\\_20110322170121825.jpg](http://cancer.snuh.org/upload/attach_file/2011/03/22/bon_20110322170121825.jpg)>; 유엔명화대학교 <<http://www.buffalo.edu/news/hires/EngineeringBuilding2.jpg>>; 유엔국제회의장(상) <[http://www.kfm.co.kr/upload/file/news/재정경제국\\_브리핑\\_철산동시립도서관\\_빛공공업무시설\\_조감도.jpg](http://www.kfm.co.kr/upload/file/news/재정경제국_브리핑_철산동시립도서관_빛공공업무시설_조감도.jpg)>; 유엔환경연구소 <[http://news.invil.org/article/PnArticleDetail.jsp?article\\_no=35180](http://news.invil.org/article/PnArticleDetail.jsp?article_no=35180)>; 게스트하우스 <[http://www.wallcoo.net/cartoon/3d\\_commercial\\_architectural\\_renderings\\_02/Museum%203D%20Architectural%20Renderings%20CSJXG\\_1016.html](http://www.wallcoo.net/cartoon/3d_commercial_architectural_renderings_02/Museum%203D%20Architectural%20Renderings%20CSJXG_1016.html)> 그림 참고하여 편집.



## 마. 로드맵

### (1) 1단계

- 남한에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을 전담할 대통령직속기관 형식의 ‘유엔기구유치위원회’(가칭)를 구성·출범시킴.
- 국가적 전방위 외교를 통해 유치될 유엔환경기구를 확정함.
- 북한에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호응을 촉구함.
- 남측 고성 DMZ 접경지역에 생태평화공원 부지를 조성함.
-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을 완공을 서두름.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측 고성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 설치함.

### (2)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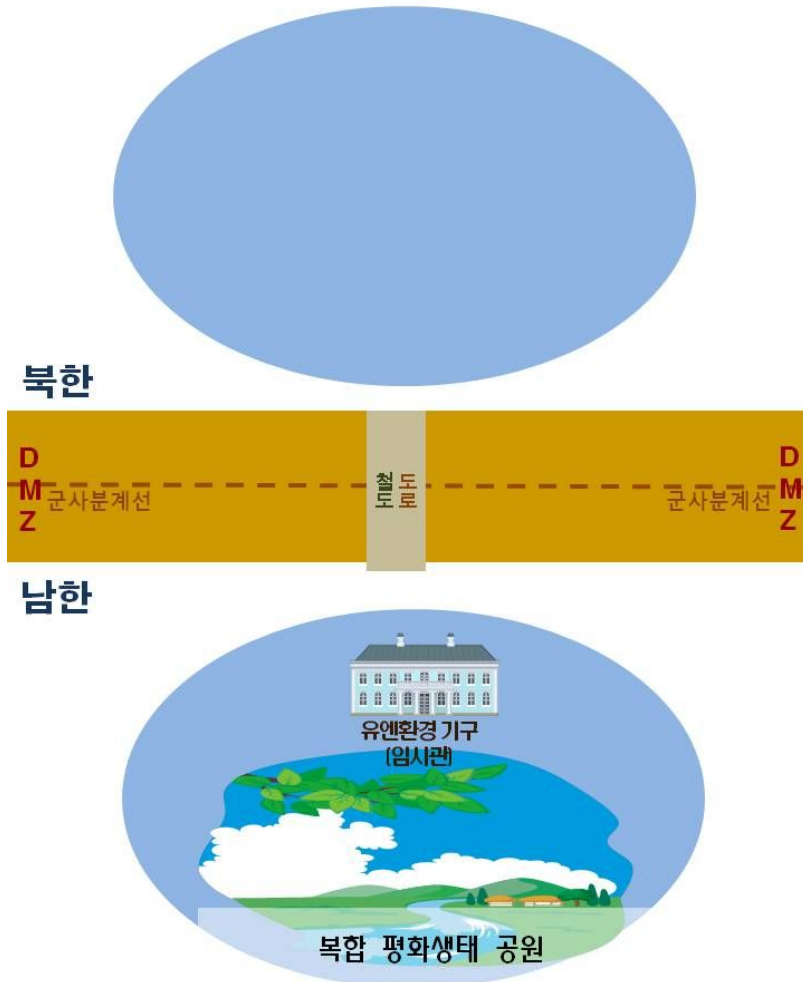
-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남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기구 임시 본관, 유엔환경연구소 본관, 유엔평화연구소 본관, 유엔환경대학교 본관, 유엔평화대학교 본관을 조성함.
-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 고성군 가운데 지점인 DMZ내에 유엔환경기구 본관을 조성함.
  - 남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본관, 유엔평화연

- 구소 본관, 유엔환경대학교 본관, 유엔평화대학교 본관을 조성함.
- 북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기구 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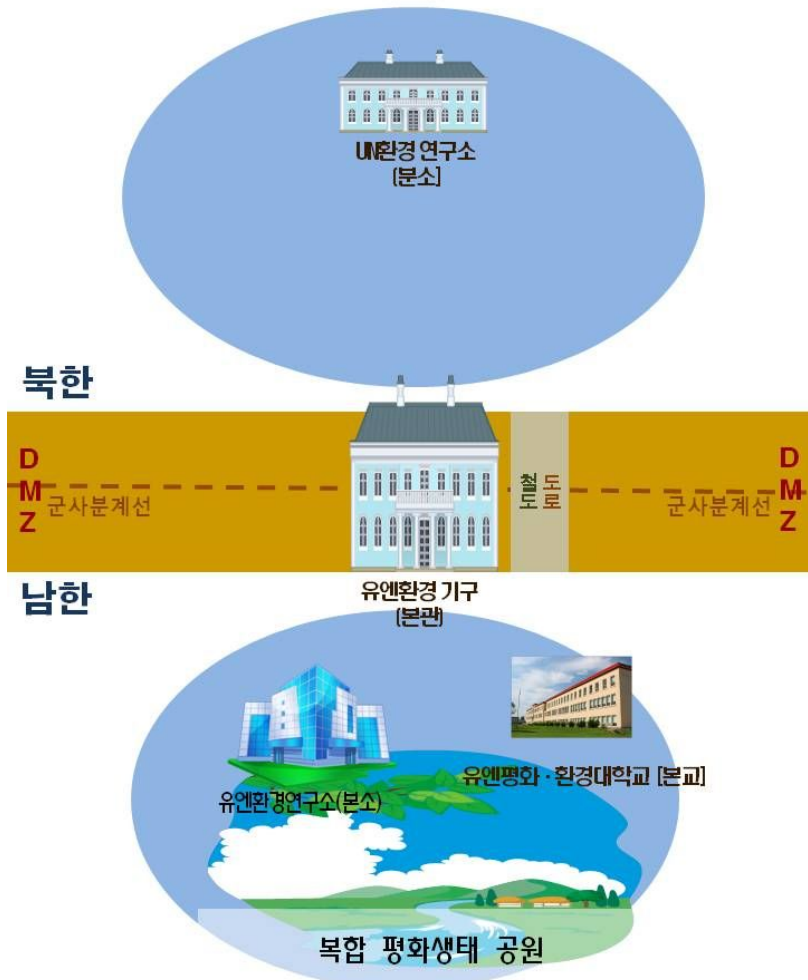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북측 고성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 설치함.

### (3)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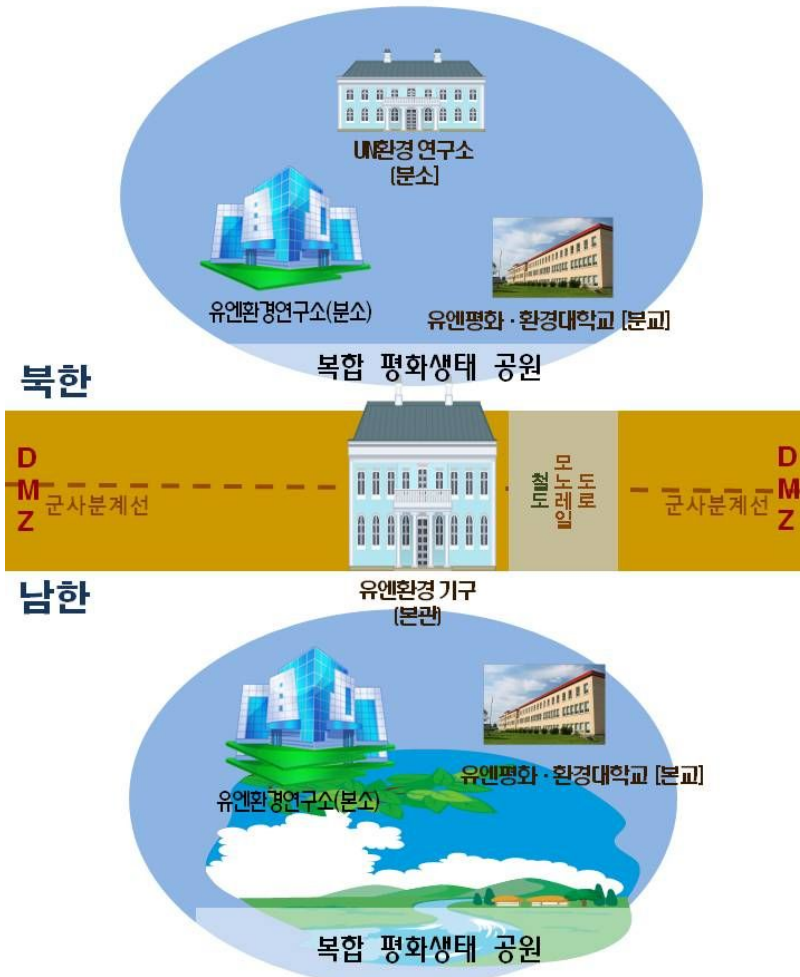
-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DMZ내에 유엔환경기구와 관련 부대시설을 완공함.
  - 북측 고성군 DMZ 접경지역에 유엔환경연구소 분소, 유엔평화연구소 분소, 유엔환경대학교 분교, 유엔평화대학교 분교를 조성함.
- 양양국제공항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남북측 고성, 금강산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 예를 들어 전기버스나 모노레일로 연결함.
-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속초 고속전철을 완공함.



Ⅱ 그림 Ⅱ-4-1 Ⅱ 고성 유엔환경기구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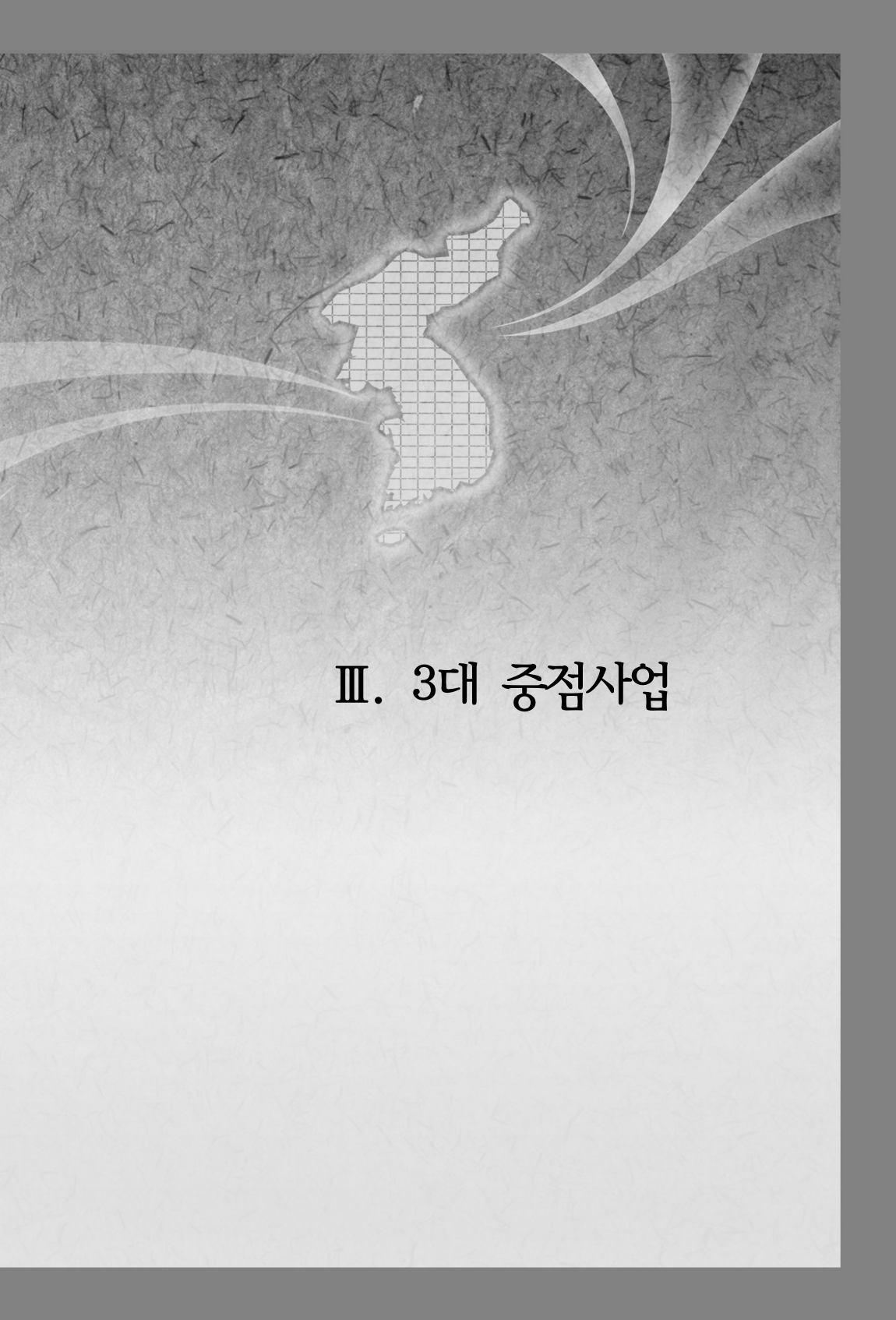
|| 그림 II-4-2 || 고성 유엔환경기구 2단계



Ⅱ-4-3 Ⅲ 고성 유엔환경기구 3단계

## 바. 기대효과

- 유엔환경기구 유치와 환경보호활동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인 환경 및 에너지문제의 해결에 돌파구가 될 것임.
  - 동북아의 실질적 상생공영에 기여함.
- 대한민국을 평화와 환경보호의 지도국으로 발돋움시킴.
  -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환경보호, 녹색성장에 기여하려는 지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함.
- 유엔이란 국제기구의 유치, 육·해·공로의 연결, 수도권과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연결로 양양-속초-고성 지역이 환동해권 발전의 중추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유엔기구 소재지와 설악산/금강산국립공원과의 연계 관광이 실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유엔기구의 유치와 그 활동으로 한국의 지위를 고양함.
  - 유엔기관 활동의 강화로 한국의 평화적 위상이 격상되고 한국인의 유엔기관 진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음.
- 분단기간 동안에는 남북한의 상생공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북한의 평화적인 체제변화를 촉진함.
-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 뻗어 가는데 기여함.
-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국가 성장, 한반도 평화안정, 녹색성장, 국토 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통일 촉진이라는 민족대계에 기여함.



### Ⅲ. 3대 중점사업





## 1.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 가. 배경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상, 한반도 평화구축 상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2013년 7월 27일 오전 10시는 「정전협정」이 서명된 지 60년이 되는 날로서,
  - 분단의 현장을 우리는 물론, 전 세계시민들이 체감하고 분단의 비극과 그 극복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013년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실질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함.
  - 단순한 형식적인 기념행사를 벗어나,
  - 전 세계에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분단의 종식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함.
- DMZ 평화적 이용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MZ의 현재 상황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나. 목적

- DMZ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분단극복과 DMZ, 그리고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DMZ가 뜻대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 제1의 중무장지역으로서 남북한의 각종 군사시설과 참여한 대치로 긴장의 현장임을,

- 인간에 의해 초토화되었던 자연환경이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복원되어 다양한 생물상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생태계임을,
  -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경의선, 동해선이 보여주듯이 남북협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신정부의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함.
-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희망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갈등과 대립의 상징지역인 DMZ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줌.
  -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DMZ의 평화적 이용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적극 홍보함.
- DMZ를 세계적인 관광브랜드화 하여 세계인이 기억하고 찾고 싶은 관광명소화 함.
- ‘21세기의 만리장성’이며,
  - 첨예한 군사적 대치선이자,
  - 화해와 협력의 통로이면서,
  - 생태적 보고임을 홍보함.

#### 다. 주요 내용

- 201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 서명 60주년을 맞아 서해에서 동해까지 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군의 주요 전망대에 방송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비치는 DMZ의 현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함.
- 국민적, 세계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이날의 생방송이 방영되도록 함.

-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심과 홍보효과를 최대화 하고, DMZ의 모습이 생중계 되는 동안 댓글, 방송화면 캡처, 인증샷 등으로 흥미를 확산시킴.
- 6·25전쟁, 그로 인해 초토화되었던 당시의 DMZ, DMZ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 현 군사적 대치상황의 DMZ현장, 생태계의 보고가 되어 있는 DMZ의 생태성을 종합적으로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줌.
- 영상 중계와 더불어 한반도문제 및 생태계 전문가, 세계적 석학과 지도자와의 대담을 통해 「정전협정」, DMZ와 그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 등을 홍보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여론을 형성함.



|| 사진 III-1-1 || DMZ Today 대상도

-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 DMZ 생방송 시 그곳의 현지 전문가, 석학, 정치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나아가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생방송 대담을 진행하도록 함.
- 영상 생중계 시 신정부의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역적, 세계적 평화를 염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과 그것을 위한 DMZ 평화적 이용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음.
- DMZ 평화적 이용은 결국 북한의 호응과 협력이 중요한 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방송 송출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세계의 눈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함.

## 라. 로드맵

### (1) 1단계

- “2013년 7월 27일, DMZ Today” 행사의 의미를 국내외적 차원에서 홍보함.
- DMZ를 촬영할 DMZ 남방한계선 주요 군사전망대를 선정하고, 방송카메라를 설치함.
  -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편집하고 이를 전 세계에 방송으로 소개하여 관심을 제고함.
  -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함.

## (2) 2단계

- 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국내외 인사 단체들이 참여하는 DMZ 관련 다양한 문화 예술 학술행사를 거행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킴.
  - 평화 생태를 주제로 하는 음악공연, 연극공연, 학술토론회,
  - 청소년들이 DMZ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3) 3단계

- 2013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DMZ 전역의 현장을 전 세계에 생방송함.
- 6·25전쟁, 초토화되었던 당시의 DMZ, 이후 60년에 걸쳐 DMZ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 생태계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난 생태계의 현장과 생물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함.
- 국내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한반도문제 및 생태계 전문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세계적 지도자나 석학과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함.
- 신정부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함.

## 마. 기대효과

- 정전 6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되기 어려웠던 DMZ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생중계함으로써 DMZ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음.

- DMZ를 세계적인 관광브랜드화 할 수 있음.
- 우리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DMZ 평화적 이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
- DMZ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과 더불어 DMZ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 및 보전 필요성을 적극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환경보호의 지도적 국가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함.

## 2. 유해발굴

### 가. 배경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유해가 6·25전쟁 이후 국내에 최초로 봉환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었음.
  - 2012년 5월 25일,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 12구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봉환됨.
  - 이 유해들은 미·북 유해 공동발굴 합의에 따라 미군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6·25전쟁 당시 카투사로서 미군에 배속되어 장진호 전투 등에 투입되어 전투하다 희생된 국군들임.
  - 우리 정부는 이 유해봉환을 위해 장성을 단장으로 하는 인수단과 공군 전용수송기를 하와이 현지로 보내 봉환하였고, 국내봉환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등 최고의 예우로 진행하였음.

- 돌아온 12구의 유해 중에서 2구는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감격적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이를 계기로 6·25전쟁 국군전사자의 유해발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음.
- 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감안할 때, 유해 공동발굴은 남북이 큰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 명분도 높일 수 있는 사안임.
  - 6·25전쟁 유해 공동발굴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북한 측이 의외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음.
- 6·25전쟁 국군전사자의 유가족들이 점점 고령화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임.
  - 6·25전쟁 당시 참전한 국군들이 살아있다면 대부분이 80대 중후반임.
  - 따라서 그 부모세대나 형님 등은 대부분 이미 고인이 되었을 것이고, 동생이 있다 해도 80대에 이르는 바, 이 분들의 염원을 고려한다면 이산가족문제들과 함께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6·25전쟁 전사자 신원확인 유전자(DNA) 시료채취 행사장에 유가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함.<sup>6</sup>
- 특히 DMZ는 1951년 중반 이후,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하여 고지

<sup>6</sup> 국군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6월 들어 매일 20~30명의 유가족들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고 있고, 2~3일에만 1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함.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은 2003년 357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만 9천 442명이 참여했음. 「연합뉴스」, 2012년 6월 5일자 인터넷기사 참조.

전의 형태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진 지역으로서 많은 전사자의 유해가 접근도 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반세기 지나옴.

- 따라서 이의 해결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 나. 목적

### ○ DMZ 일원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함.

- DMZ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이며, 남과 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긴장의 지역임.
-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정전협정」체결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필사적인 노력이 전개된 최대의 격전지이며 따라서 많은 유해들이 잠들어 있는 곳임.
- 남북이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은 물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sup>7</sup>
- DMZ내 유해 공동발굴은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서 합의한 DMZ 평화적 이용의 일환인 바, 향후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음.

### ○ 국가를 위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함.

-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 중 13만 여기는 아직도 한반도 산야에 묻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sup>8</sup>

<sup>7</sup> 2007년 11월 7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의하여 북한이 호응해 옴에 따라, “쌍방은 6·25전쟁의 유해발굴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sup>8</sup> 2000년부터 남측지역에서 유해발굴사업이 개시된 이래 2009년 말까지 총 3,380구를 발굴하였으나, 이는 총 유해의 3%에 불과한 실정임. 정부는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창설하고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해발굴



-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를 국가가 끝까지 발굴하여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임.
  - 국가가 바로 이러한 기본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지금의 군인들에게도 국가를 믿고 기꺼이 희생하려는 정신이 제고될 것임.
- 6·25전쟁을 청산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킴.
- 6·25전쟁 참전 국군 유해발굴은 국가의 본분인 동시에 6·25전쟁의 유산을 청산하는 의미인 바, 적극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 특히 향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과제임.
-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가족의 한을 풀어줌.
- 미국은 1996년부터 이미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북한 전역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를 2005년 중단 시까지 꾸준히 발굴해 왔음.<sup>9</sup>
  -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7년이 되어서야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등 늦은 감이 있음.
  - 이제라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동 사업에 보다 적극 나설 경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염원, 특히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동 사안에 대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감안하여 경색된 남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sup>9</sup>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과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미군유해 225구를 발굴 송환하였으며, 미국은 북측에 2,2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2년 5월 25일 국내로 봉환한 12구의 국군유해도 장진호 인근에서 발굴한 유해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음.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한 이후, 북측은 이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했음.
- 2007년 12월 판문점 우리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단(단장은 현재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 대장, 당시는 중장)은 유해 공동발굴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남측이 원하면 언제라도 응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러한 북측 태도를 감안할 때 신정부는 제반 사업 중에서도 동 사업을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촉매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 의의

### (1) 정치적 측면

- 국가의 기본책무와 도리에 관한 문제임.
  - 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함.
  - 6·25전쟁의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은 전쟁의 청산은 물론, 이 땅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핵심 사안임.
  - 새 정부가 동 사안을 남북 간에 합의하여 추진할 경우,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조치를 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

### (2) 군사적 측면

- 남북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DMZ내에서 6·25전쟁의 전사자 유해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함.

-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국방장관회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구축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DMZ가 평화적으로 이용될 경우, 대결의 상징이 교류와 평화의 통로로서 역할이 바뀌고 남북군사관계 발전에 기여함.

### (3) 경제적 측면

- 동 사업 자체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동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와 공생 공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동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예산들이 투입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짐.
- 북한의 경우 별다른 부담이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다만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능한 한 현금지불은 지양하도록 함.

### (4) 국제적 측면

-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교협력 관계를 강화함.
  - 6·25전쟁은 남북 당사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이른바 국제전이었음.
  - 따라서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해발굴은 인도주의적인 사업인 바,

-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발굴한다는 자체로서 한반도의 안정을 부각시킬 수 있고,
- 발굴과정에서 참전국 군인들의 유해가 발견되어 송환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교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라. 주요 내용

- DMZ내 남북 유해 공동발굴 시행을 위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실천합의서를 타결함.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는 유해를 공동발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인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실무협의체는 새롭게 구성하거나,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남북 군사 실무회담 채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2007년 11월 국방장관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함.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유해발굴과 관련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가동하여 향후 DMZ내 유해발굴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이를 합의서, 「DMZ내 6·25 전사자 유해 남북 공동발굴에 관한 합의서」(가칭)에 담아야 함.
  - 이 실행합의서에는 DMZ내 유해발굴대상지역의 공동조사, 정보자료 수집 및 교환, 시범 발굴, 발굴단 구성, 시행시기 등이 포함됨.
- DMZ내 시범발굴지역을 선정하고 유해 매장과 관련된 정보자료

를 상호 교환함.

- 현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DMZ 전 지역에서 동시에 유해발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DMZ내 발굴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시범발굴지역은 1953년 6월 정전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금성, 김화지구 전투를 비롯하여 중·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바, 이러한 지역 중에서 시범발굴지역을 선정함.
  - 발굴지역이 선정된 후에는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교환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발굴 이후에는 DMZ내 여타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함.
- DMZ내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조사를 실시함.
- 실무협상을 통해 DMZ내 시범발굴지역이 선정되면 조사단을 구성하고 발굴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함.
  - 다만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공동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기 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를 교환하는 방안을 고려함.
  - 조사단의 구성은 우리 측이 주도하며, 북측은 해당지역의 안내 및 인력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DMZ내 유해 시범발굴이 완료되면 발굴 대상지역을 확대함.
- DMZ내 시범발굴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발굴을 실시함.

- 발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통신과 안전문제이며, DMZ에는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고 군사적으로 침예한 대치상태에 있는 만큼 사소한 일로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시범발굴이 실시된 이후 발굴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 DMZ내 여타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북측 전 지역으로 확대함.
- 최고의 격전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굴된 유해의 송환 및 후속조치를 실시함.

- 6·25전쟁의 유해송환은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sup>10</sup>
- 다만 발굴현장에서 북한군 또는 중국군임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북측으로 인도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우리 측으로 송환함.
- 송환된 국군유해는 일단 국립현충원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유가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의 예우로 안장절차를 엄수함.
-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봉안하고, DNA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
- 유해감식을 통해 참전국 유해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국에 통보하여 절차를 거쳐 인도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유해를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굴하는 의미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

<sup>10</sup> 특히 동 사안의 추진과정 전·후에 유엔사 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특히 미군유해 발굴과정에서의 전례와 관련 자료를 협조받도록 해야 할 것임.

## 마. 로드맵

### (1) 1단계

- 남북 유해 공동발굴 관련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함.
  - 신정부 수립 이후 대북정책이 확정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바, 당국 간 접촉 재개 이전까지는 내부적인 준비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관련 대책 수립에 집중함.
  -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일부,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 관련부처가 포함되는 범정부 추진 TF를 가동함.
  
- 유해 공동발굴 관련 종합대책의 발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함.
  - 국방부(정책실 및 유해발굴사업단)를 중심으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 조직된 TF 차원에서 검토하여 발전시킴.
  -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유해발굴 관련 경험을 전수받고 하와이 유해감식소 등 관련기구들과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발전시킴.
  
- 실행기구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현재 대령급이 지휘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장성급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격상시켜 본격 발굴에 대비함.
  - 현재의 조직보다 인원과 예산을 증액함.
  - 미국 하와이 소재 유해발굴단과의 협력을 증대함.
  
- 남북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타결해야 할 실천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유해발굴소재 및 지역 등 제반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남북간 협의가 추진되는데 따라 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함.

○ 남북 당국 간 접촉 재개 시 북측의사를 타진함.

- 신정부 출범 첫해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재개될 경우, 우리 측은 남북간 이미 합의한 사안 중에서 우선 해결할 사안들을 사전에 선별하고, 그 중에 최우선 추진사안으로서 6·25 전쟁 유해 공동발굴 관련 사안을 북측에 적극 제기함.

○ 국내적인 공감대를 형성함.

- 동 사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의 관심사인 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함.
- 국내 관련 NGO 등을 통해 서명운동 전개 등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함.
- 언론을 통해 동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함.

○ 「정전협정」 협의 창구, 또는 미·북 협의 채널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을 촉구함.

- 6·25전쟁 유해의 송환문제는 「정전협정」 관련 사안인 바, 「정전협정」 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나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창구를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함.<sup>11</sup>
- 2005년 이후 중단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유해발굴 추진이 재개될 경우, 이 협의채널을 통해 중재하는 방안도 고려함.

<sup>11</sup> 미·북간 한국전 미군유해를 발굴하여 송환하는 과정에서도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추진한 전례가 있음.



- 국제적십자사 및 국제 인권단체 등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을 촉구함.
  - 유해송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사안인 바, 국제적십자사나 국제 인권단체 등을 통해 동 사안에 대한 실상과 필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관련국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 북측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함.
- 6자회담 등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측면 지원함.
  - 6자회담이 개최되고 북한 핵문제 관련 협의가 진전이 있을 경우, 별도의 포럼을 통해 동 사안의 추진을 촉구하는 등 측면 지원함.

## (2) 2단계

-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함.
  - 남북 당국 간 접촉을 통해 원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군사실무회담 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향후 동 사안 협의를 위한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함.
  - 상기 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또는 제1차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동 사안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협의함.
- 남북간 합의서 타결 시 국회 비준 및 관련법을 제정함.
  -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 시 비준을 받으며, 관련법을 제정함.
  - 이로써 동 사업의 장기간 지속성을 확보함.
- DMZ내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를 개시함.

- 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실무협의회는 구체계획 수립 시까지 최소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동 실무협의회에서는 유해 공동발굴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합의서 형태로 타결함.

○ DMZ내 일정구역에 대한 시범발굴을 실시함.

- DMZ내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를 시범발굴지역으로 선정하여 공동조사 및 시범발굴을 실시함.
- 발굴된 유해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동 사안의 의미를 적극 홍보함.

(3) 3단계

○ 유해발굴지역의 확대에 합의함.

- DMZ내 일정지역에 대한 시범발굴 이후, DMZ 여타지역으로 확대함.
- 이어 북한 전 지역으로 발굴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되, 격전지 우선으로 발굴을 추진하도록 남북 간에 합의함.

○ 유해 공동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유해발굴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재 적군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북한군 유해를 송환하고, 남측 지역에 묻혀있는 북한군 유해의 발굴문제를 협의함.

## 바. 기대효과

- 정부의 기본책무 완수 및 대국민신뢰를 확보함.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동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분단/전쟁 이후 첫 조치인 바, 신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임.
- 장병의 사기 증진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도 기여함.
  -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국가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 제고되고 사기가 증진될 것임.
-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임.
  - DMZ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남과 북의 막대한 군사력이 집중하여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임.
  - 이러한 접적지역에서 6·25전쟁 유해 공동발굴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확대된다면,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과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남북간 합의이행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시행 가능성을 증대시킴.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대로 남북간 6·25전쟁 유해의 공동발굴이 시행된다면 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함.
  - 이미 합의한 사항을 가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신

뢰가 구축될 뿐 아니라, 향후 군 인사교류, 군사정보교환 등 「남북 기본합의서」 12조에 명시된 여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음.

- 북한 측이 유해 공동발굴과 송환에 적극 호응해 올 경우 국민들의 대북 적대감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발전됨.
-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 시 남북 간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됨.
  -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감소되고 실질적인 평화상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상호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 바, 유해발굴을 통해 남북간 신뢰가 구축될 경우, 이는 향후 남북 간에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3.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가. 배경

- 분단 60여년의 기간 동안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정치·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였음.
  - 하지만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비롯된 갈등의 심화로 인해 정치·군사적 차원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 정치·군사적 대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서 인간의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남북한의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분야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남북한 당국이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으로서 상호 의료협력 및 공동 진료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의료협력 및 지원 등을 통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방식을 통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평화진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특히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의 상징적 지역인 DMZ내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함.
- 군사적 대결의 상징지역을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하고자 남북한 마을(대성동, 기정동)이 접하고 있는 지역에 유엔평화병원을 건립함.
- 양측의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인도적 측면의 현안들, 예를 들어 식량 지원,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 이산가족상봉 등을 다루어 분단과 전쟁으로 소실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유엔평화병원 건립은 정치, 이념, 체제간 차이와 갈등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자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음.

-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함.
- 남북한 모두 유엔회원국으로 양측이 유엔의 제안이나 결의를 존중할 수 있으며, 비정치적 사안인 평화병원 건립을 반대할 국제적 명분은 약함.
-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을 감안하여 유엔이 한반도 DMZ내에 인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

#### 나. 목적

- DMZ내에 유엔평화병원 건립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 필요 시 국군과 인민군에 대한 공동 진료는 물론, 남북한 의료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 의료인력 교육 및 의료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보건의로 환경 개선에 기여함.
- 인도적 관심, 평화 구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
  - 휴전선을 하나의 긴 벽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 세워지는 병원은 긴 벽에 설치되는 하나의 창문에 해당함.
  -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지금까지 판문점이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면,
  - 평화병원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간 소통 통로를 개설함.
- 유엔평화병원이 설립될 경우, 유엔기구가 유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지게 되고 유엔의 깃발 아래 국제의료팀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평화보장이 제고될 것임.

## 다. 의의

- 병원을 건립할 경우, 남북한 양측의 군사시설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 그대로 건립이 가능함.
  - 즉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개발 때처럼 양측의 휴전선 일대에 대한 별도의 공사나 군사력의 이동배치가 불필요함.
  - 이미 두 마을의 출입을 위한 도로가 양측에 놓여 있고 각기 사람들이 지난 60여 년간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임.
- 남북한 의료진의 공동 진료 및 협진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 협력을 촉진하고 북한 의료진의 수련 및 의료기술 교육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시킴.
- 평화병원의 건립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 진료라는 수준을 넘어 인도적 측면의 교류협력을 실행하는 평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적십자회담, 의료분야 당국 실무회담 등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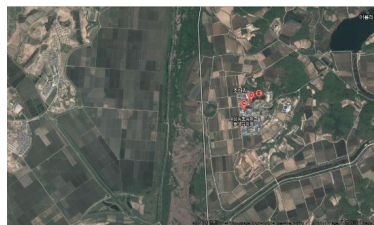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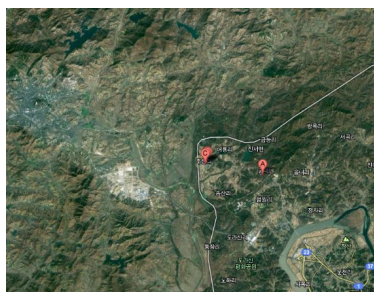
## 라. 주요 내용

- 한반도 중심에서 동서로 248km에 달하는 DMZ내에 한 개씩의 남북측 마을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유엔평화병원을 설립함.
  - 남쪽에 속한 대성동 마을과 북쪽에 속한 기정동 마을은 서로 360m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그 공간은 지금 대부분 농지이고, 바로 그 가운데 자리에 유엔평화병원을 세워 병원 본연의 업무와 함께 남북한의 창구역할로 기능하도록 함.
- 유엔평화병원의 DMZ내 설립을 그간 추진해온 「평화병원재단」(Peace Hospital Foundation)의 한국본부를 설립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
  - 「평화병원재단」은 2004년 미국에서 “휴전선에 한민족 평화병원 세우자”를 목표로 출발하였음.
- 유엔평화병원의 부지는 약 10만평(대성동과 기정동 사이)으로 예상함.
  - 규모는 어린이병동(500병상), 성인병동(300병상), 재활병동(200병상) 등 총 1000병상이며, 비용은 연 1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유엔평화병원을 양방과 한방은 물론 우리의 전통의학도 함께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함.
- 초기에는 의료 진료에 집중하되 남북의 상호 호응도의 진전과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여 북한 인력대상 의료교육 및 의료장비 지원, 공동 연구로 사업을 확대함.
  - 한국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는 신제품의 수용으로 인해 교환주기가 짧기 때문에 재활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장비들이 많음.
  - 이러한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한 의료협력 진전에 기여하도록 함.



- 병원 내에 남북간 민간교류를 증진시키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의 시설을 만들어 남북간 각종 학술 강연이나 예술 공연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유엔평화병원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유엔사령부와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
  - 남북 공동 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함.
- 평화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과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국제적 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함.
  - 남북한 모두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사가 병원의 운영과 남북간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Ⅱ 사진 III-3-1 Ⅱ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위치도

## ■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 그림 III-3-1 ■ 대성동 유엔평화병원 위치도

\*출처: 유엔평화병원 <[http://www.damyang.go.kr/uploaded\\_files/info\\_s04\\_02/\(7.16\)담양노인복지시설변경조감도1.jpg](http://www.damyang.go.kr/uploaded_files/info_s04_02/(7.16)담양노인복지시설변경조감도1.jpg)> 그림 참고하여 편집.

## 마. 로드맵

### (1) 1단계

- 평화병원재단 한국본부의 체계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DMZ내 유엔평화병원건립안」(가칭)을 정부차원의 유엔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유엔의 결의(Resolution)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 「정전협정」 서명자인 유엔군사령부, 북한, 중국에 본 사업의 의미를 소개하고 호응을 요청함.
- 국제적십자사, 남북적십자사를 통해 본 사업의 의미를 소개하고 지지를 요청함.

## (2) 2단계

- 유엔평화병원 건립에 대한 「정전협정」 서명자들의 동의를 취득함.
- 유엔평화병원 건립에 관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채택함.
- 「유엔평화병원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되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
-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외적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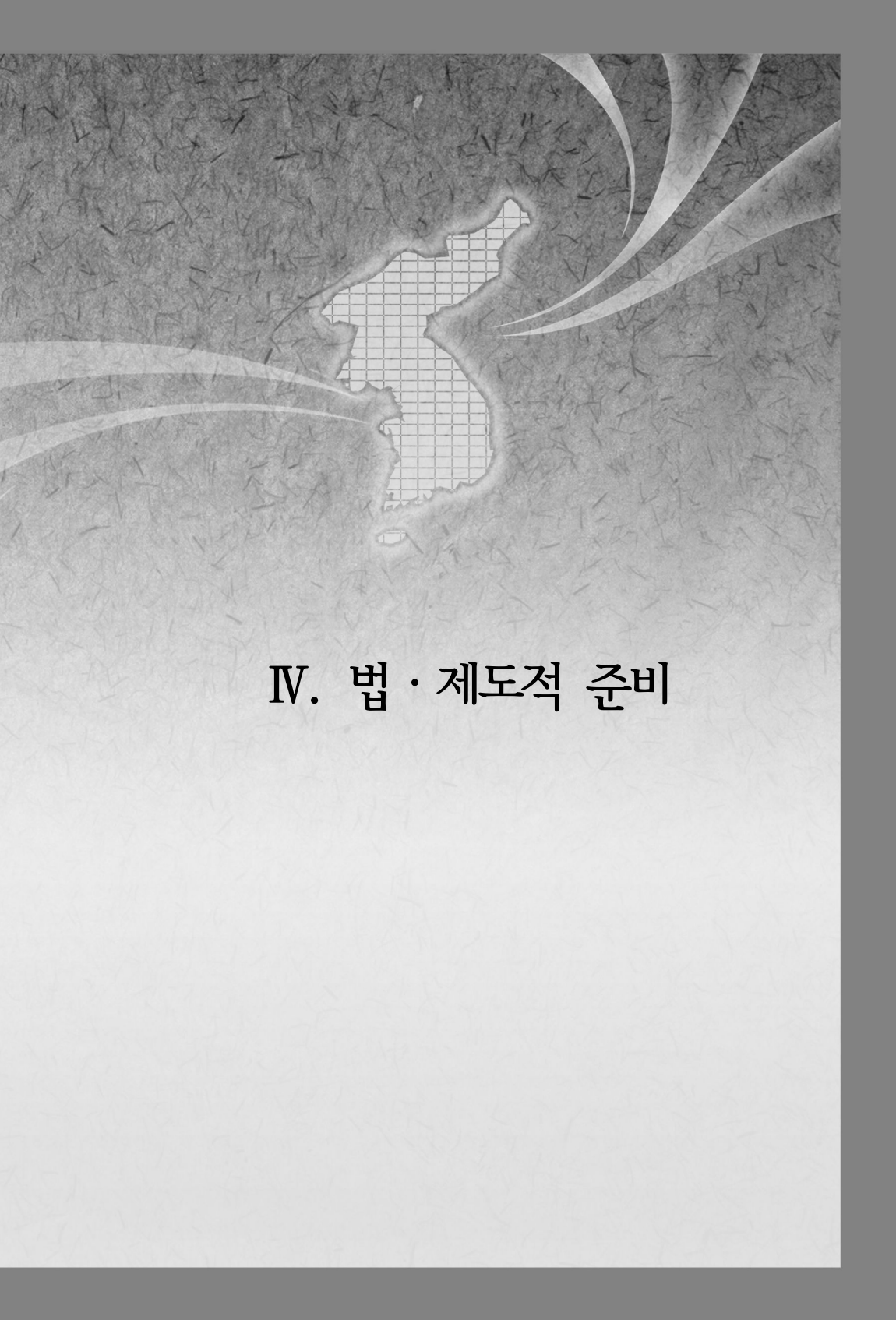
## (3) 3단계

- 유엔평화병원 기공식을 거행하고 신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여 진료료를 시작하도록 함.
  - 국제적십자사,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각 분야 의료진 확보,
  - 병원건물 시공 및 준공,
  - 각종의료장비 설치,
  - 유엔평화병원 개원식을 추진함.

## 바. 기대효과

- 죽음의 무대였던 DMZ를 남북한 환자들의 생명을 되살리는 생명의 무대로 승화시킴.
- 남북간 인적 접촉의 확대를 통해 상호 이질성을 줄이고 공감대를 높이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음.

- 유엔의 깃발 아래 국제적인 의료진이 활동함으로써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의 지역이 평화와 협력, 인간의 생명존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변모시킴.
- 북한 대상 의료교육, 수련, 공동 연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여건을 개선함.



## IV. 법 · 제도적 준비



## 1. 관련 법·제도 검토

### 가. 통일 및 국토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3조에 의해 미수복된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리 권한이 명시됨.
  -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 조항을 명시함.
  -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여 DMZ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와 경제를 함께 향유하면서 이를 확대 발전해 나가는 법적 논리 개발이 가능함.
  
- 「농지법」
  -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법 제1조).
  - DMZ 및 접경지역의 농지에 대한 이용 및 보전과 아울러 농지 전용의 필요성과의 충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산지관리법」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법 제1조).
  - DMZ 및 접경지역의 국토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법 제1조).
-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라는 측면과 일부 충돌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법제가 개선되어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함.
- DMZ 및 접경지역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나. 산업단지 관련 법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11.4.14] [법률 제10589호, 2011.4.14, 일부개정]
- 이 법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 이 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 2012.8.5] [법률 제11020호, 2011.8.4,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철원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 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 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안 됨.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따르게 함.
  -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

용하며,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  
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름(지침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법 제1조).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  
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  
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함.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법 제57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  
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 2012.7.1] [법률 제11466호, 2012.6.1, 일부개정]

-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함(법 제1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2호, 2011.3.30, 타법개정]
  -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다. 기타 관련 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차장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시행 2011.7.6] [법률 제10555호, 2011.4.5, 일부개정]
  -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시행 2011.10.26] [법률 제10898호, 2011.7.25, 타법개정]
  -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영 제1조).
- 「남북교류협력법」
  - 남북교류협력법에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조항을 신설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한 관계를 냉전관계가 아닌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 마련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9호, 2011.7.25, 일부개정]
  -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4.26] [법률 제9939호, 2010.1.25, 제정]
  -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마. 지역균형발전법

### (1) 각 주제별 법적 검토사항 및 개선과제

#### (가) 「정전협정」

-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DMZ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함.
- DMZ에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DMZ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그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항).

- 나아가 DMZ에서는 상대방 지역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제8항).

(나)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함.
  -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제1조).
  -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DMZ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할 법률적 의무가 있으며, DMZ에 대하여는 남북한의 합의나 통일정책 관련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음.

(다) 민간인통제선과 접경구역 관련 법령

-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민간인통제선’에 대하여 규정함.
    - DMZ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공동구역에 대한 이용 법제화가 필요함.

## ② 「접경지역지원법」

- 「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라) 국제법적 측면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DMZ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놓임.
  - 분단국이론에 따르면, 남북한이라는 두 분단국 실체의 상 위에 하나의 전체국가(Gesamtstaat)가 존재하고 영토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은 이 국가에 속함.
  -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할 경우 DMZ에 대한 영토주권은 전체국가의 한국에 귀속됨.
  - 학자에 따라서는 이 지역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영유하는 일종의 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도 함.<sup>12</sup>
- 영토주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DMZ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Jurisdiction) 또는 통치권 아래 놓인다는 점임.
  - DMZ는 그 영토주권은 한국 또는 남북한에 속하지만, 관할권/통치권은 군사정전위원회라고 하는 국제조약상의 기관에 속하는

<sup>12</sup> DMZ가 남북한의 공동영유 하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 관해서는 이장희, “세계화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세계화와 통일정책의 당면과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9회 통일문제 세미나, 1995.9.20), p. 21.

이중적 성격을 지님.

- DMZ에 대한 소유권(Dominium)적 관점에서 처분권한을 의미하는 잔존주권(Residual sovereignty)은 한국 측에 있지만, 이 지대 내 사람과 물(物)을 통제하는 관할권은 쌍방 군사령관(또는 쌍방 군사령관 각자의 지휘 하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 측 합의체 기관과 공산측 합의체 기관)에 의해 각각 행사됨.

(마)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합의서

- 현재 DMZ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는 남북 간의 합의서는 없는 상태임.
  - 1972년 7월 4일 처음으로 남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한 이래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통하여 일련의 합의서가 체결되어 왔는바, DMZ의 평화적 이용계획에 속하는 사업도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큰 틀 안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합의서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제19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여”(부속합의서 제3조 제2항)라고 규정함.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합의서는 남북한 출입, 통신, 통관, 검역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남북사이의 「도로·열차운행합의서」는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리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간의 통행 등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합의서는 DMZ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과 부분에서 DMZ와 부분적으로 관련되며, 이러한 한도에서는 DMZ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 DMZ 평화적 이용 관련 국내법제화 방안

### (가) 법제화의 기본 방향

- ① 평화통일의 원칙에 부합
  - 남북통일의 형식과 내용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이므로 DMZ에 대한 종합 계획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구축이 요구됨.
    - 하지만 DMZ에 대하여는 법률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 ② 국제법원칙과 조화
  - DMZ에 대한 종합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남북한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법원칙과 조화를 기해야 함.
    - 특히 DMZ의 종합계획은 남한만의 계획과 실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합의서

의 체결 등에 있어서도 국제법원칙과 조화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③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

- 남북한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규범영역을 달리함.
  - DMZ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법제도화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 한편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일 이전의 서독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를 참고함.

(나) 개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

① 필요성과 기본전략

- DMZ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역 개발행위는 DMZ내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의 훼손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정부 부처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내의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행위에 나선다면 생태계의 보전과 합리적·체계적 개발이 불가능할 것임.

- DMZ 토지의 소유권 확보 필요성
  - DMZ의 자연생태계의 계획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DMZ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

## ② 단계별 추진전략

### 〈현 단계〉

- 현 단계에서는 DMZ 관할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 예규, 고시의 형태로 제정함.
  - 「DMZ 평화적 이용 지침」, 「DMZ 유관부처 협력 지원규정」 등
  - 위 지침 또는 규정은 후에 제정될 「남북공동평화지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과 연속선상에 있음.

### 〈남북교류심화단계〉

- 통일 이전까지는 관할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군사분계선이남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함.
  - 「DMZ 토지 국유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함.

## ③ 주요 내용

### 〈DMZ 평화적 이용 지침〉

- DMZ 이용의 기본원칙
  - 현실성 원칙 DMZ의 이용 방안은 실현가능해야 함
  - 민주성 원칙 DMZ 이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 보전성 원칙 DMZ 이용 방안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어야 함
- DMZ 이용의 목표
  - 평화정착지대화

- 교류정착지대화
- 지구생태지대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함.

○ DMZ 이용의 절차

- 협의: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의견수렴: 의견청취·공청회 등

〈DMZ 유관부처 협력 지원규정〉

○ DMZ 유관부처 지원회의

- 관련 정부 부처 차관, 지자체 부지사 등으로 구성함.
- DMZ 평화·생태 가치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검토함.

○ DMZ 유관부처 지원회의 기획위원회

-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함.

○ 의견수렴

-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

〈DMZ 토지 국유화를 위한 법률〉

○ DMZ 토지관리기본계획

- 통일부장관이 수립함.
  - DMZ 토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함.
- DMZ 토지의 수용
- 통일부 장관은 DMZ의 생태환경의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DMZ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
  - DMZ 토지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수용함.
  - DMZ 수용계획 작성·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으로 의제함.
- 토지매수청구권
-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용 외에도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함.
- 소유자 불명인 부동산의 처리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공고함.
  - 국가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의한 수용도 병행함.

## 2. 개별 법률에 대한 법·제도 검토

### 가.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

- 남북한 및 세계평화문화타운(공간)으로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촉진 지역화 구축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파주를 평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한반도 및 세계 평화 구축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법제 검토가 필요함.
- 세계평화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세계평화문화타운조성위원회’(가칭)의 발족을 검토함.
  - 위원회 중심으로 세계평화 지역 및 문화공간 조성 기준, 긴장된 지역을 한반도의 평화도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틀 마련함.
- 현재 국내법적으로 큰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나. 철원 평화산업단지

- (1) 남북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협력협정 체결 필요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협정문 내지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순차적 합의서 및 입법이 필요함.
  - ① 1차적 과제(남북 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협정문」(가칭)

- ② 2차적 과제(남북 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합의서」(가칭)
  - ③ 2차적 과제(남북 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칭)
  - ④ 3차적 과제(남한 국회 통과):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
- 1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협정문이 필요함.
- 철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초기 남북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협정문」(가칭)이 필요함.
  - 이 협정문은 남북 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는 수준에서 1차적으로 필요함.
  - 남북한 지역에 걸쳐 조성될 산업단지는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임.
  -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사와 의지기 요청됨.
  -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가 필요함.
- 철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정문이 체결된 후 법적 구속력이 큰 남북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합의서」(가칭) 체결이 필요함.
  - 이 문제는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통해서도 경험한 바 있으므로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있을 것임.
- 남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및 출입·체류 관련 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남한주민이 철원 평화산업단지(남한지역, 북한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야기한 경우에 관해 규율하는 내용을 「철원 평화산업단지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칭)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주민이 남한지역 철원 평화산업단지(남한지역, 북한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야기한 경우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 위 합의서는 남한 주민은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함.

## (2) 남북 간 접경지역 및 DMZ 관리에 관한 협정문 체결 필요

- 군사안전보장 협정문 체결이 필요함.
  - 산업단지 조성은 남북한 접경지역인 철원지역에 설치되므로 군사관련 안전보장 협정문을 체결함.

## (3) 성공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력 협력협정 체결 필요

- 남한 지역 북한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북한과 남한 지역에 대한 안정적 인력공급 합의를 도출해야 함.

## (4) 철원 평화산업단지 내 남북간 형사충돌 관련 국내법적 문제 고려사항

- 남북한 근로자의 신변안전 보장 및 형사충돌의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형법」은 제2조(국내법)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속



- 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형법 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여기서 북한 근로자도 철원 평화산업단지에 근무할 경우 우리 「형법」 제2조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 당연히 포함되어 국내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인 철원 평화산업단지 내에서 내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모두 「형법」 제2조의 국내법으로서 취급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북한 근로자가 철원 평화산업단지 내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지가 국경선(휴전선) 이북지역일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국내법(「형법」)이 북한 지역에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이 문제를 해결함.
- 남북 간 철원 평화산업단지 설정 및 합의를 체결할 경우 국제형법 유추적용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정책 규정이나, 남과 북 사이에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체결된 각종 합의서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각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남과 북은 상호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상호 인정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로서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에 해당됨.

(5)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제 혜택

- 철원 평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함.

(6) 산업단지 내 에너지(전력, 수자원 등) 공급 문제 해결

- 에너지 공급 문제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적용을 검토함.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
  - 산업단지 조성 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함.
  - 산업용수 확보 및 사용 관련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다. 북한강 상류지역 세계평화생태호수공원 및 UNESCO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 큰 틀에서 남북한 환경분야 법 규정을 적용함.
  - 상수도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북한강 상류지역의 평화생태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평화생태호수공원조성위원회’(가칭)의 발족을 검토함.
- 평화댐문화공연장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세계평화문화댐조성위원회’(가칭)의 발족을 검토함.
- 상기 두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및 문화공간 조성 기준, 환경 기준, 측정네트워크 운영방법, 환경오염실태 등에 관한 정보·자료 및 기술교환, 환경전문가 간 학술교류, 단절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산림녹화와 정보 교환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을 고려함.

#### 마. 고성 유엔환경기구

-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위한 자문기구인 ‘유엔환경기구유치위원회’(가칭)의 발족을 검토함.
-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환경 및 문화공간 조성 기준, 환경기준, 측정네트워크 운영방법, 환경오염실태 등에 관한 정보·자료 및 기술교환, 기타 정보 교환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을 고려함.

## 참고문헌

### 1.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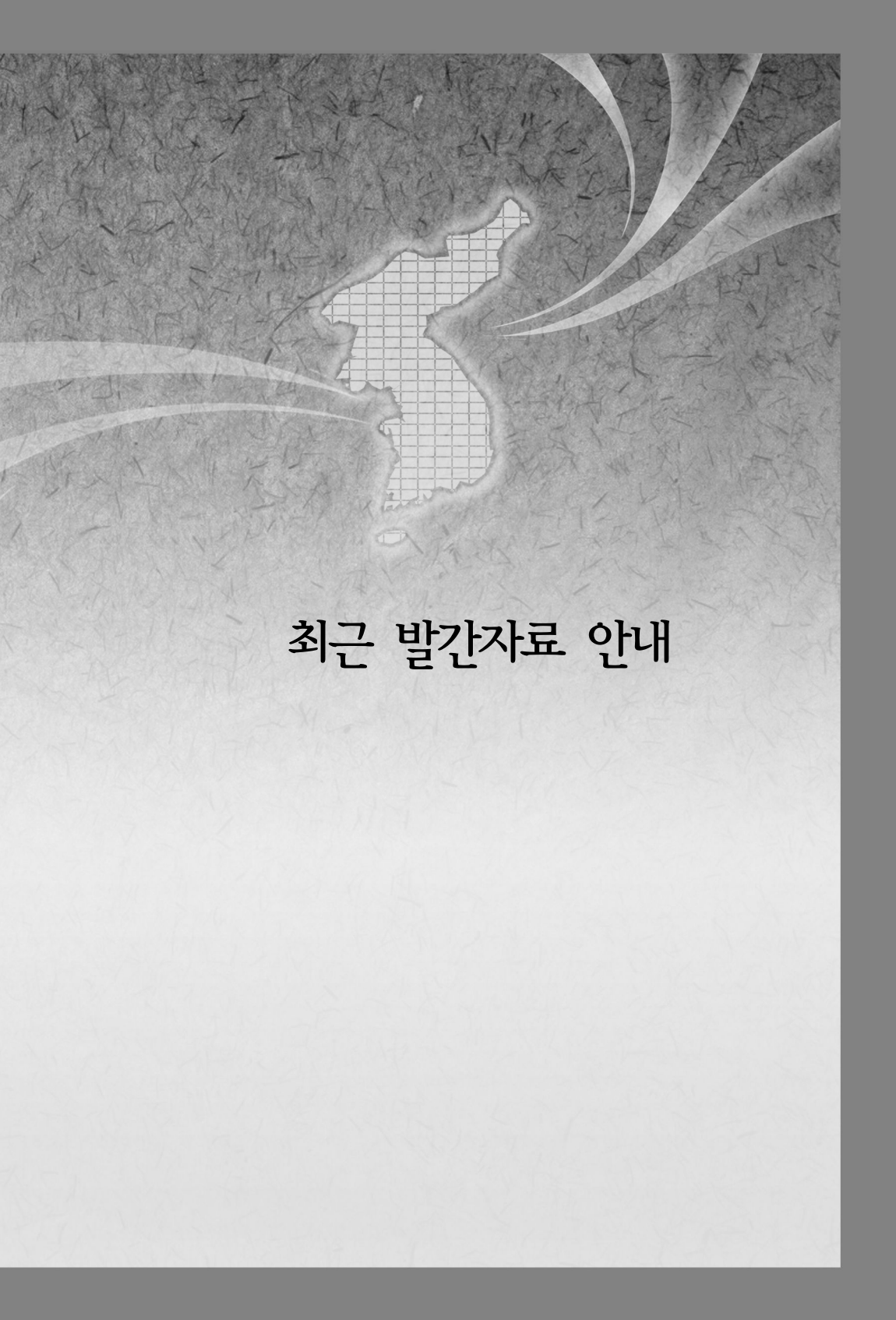
-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김우상. 『신한국책략 II: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나남, 2007.
-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손기용.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 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 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 제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외.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 포럼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_\_\_\_\_. 외.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외. 『DMZ 총람: 환경·생태 현황』.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1.
- \_\_\_\_\_. 외.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 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1.
- 통일부.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 2. 논문

- 이장희. “세계화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세계화와 통일 정책의 당면과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9회 통일문제 세미나, 1995.9.20.

### 3. 기타자료

- 『연합뉴스』.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시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시세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틀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진병곤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 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진채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 기타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 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장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운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그리고 한국의 정책적 고려	이영형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 Studies Series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lh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기타

비매품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전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2-13

[www.kinu.or.kr](http://www.kinu.or.kr)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